

경제를 살릴 성공법은 뼈아픈 구조개혁

2022. 10. 12.

2022 국민미래포럼



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재완
jbahk@skku.edu

I

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

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

걸림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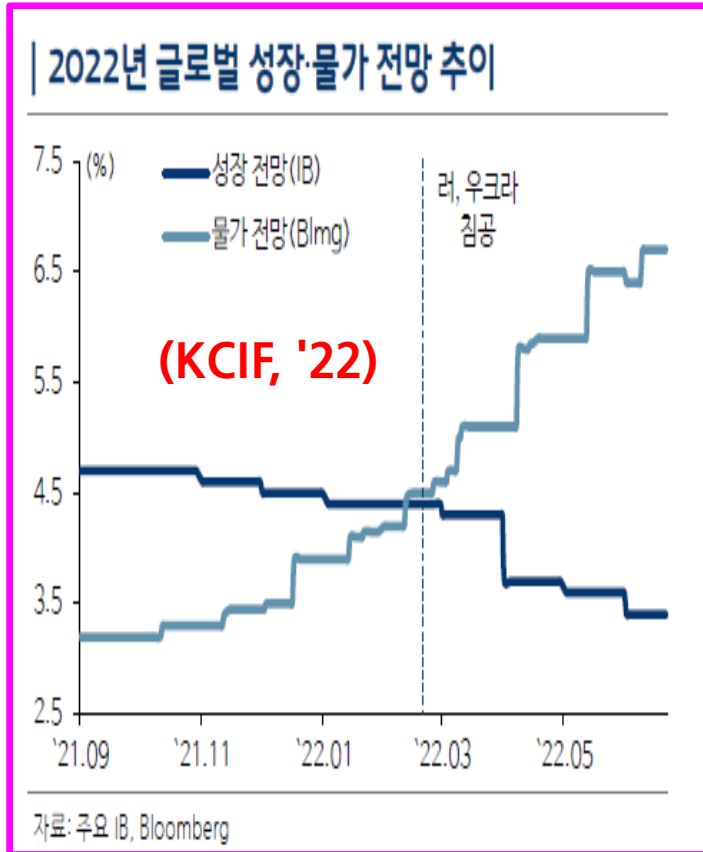
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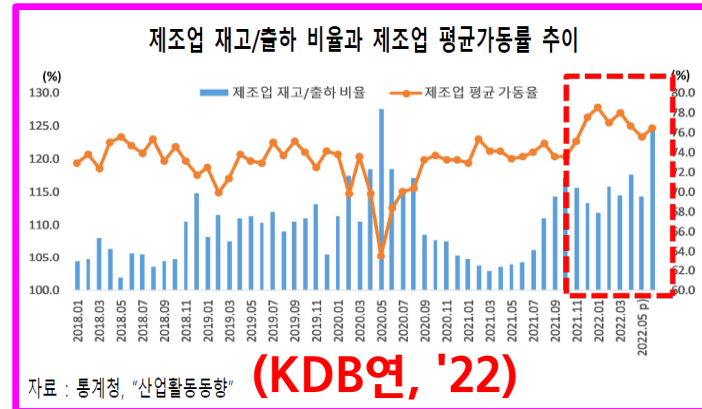
정공법은 구조개혁

1. 경기 침체의 전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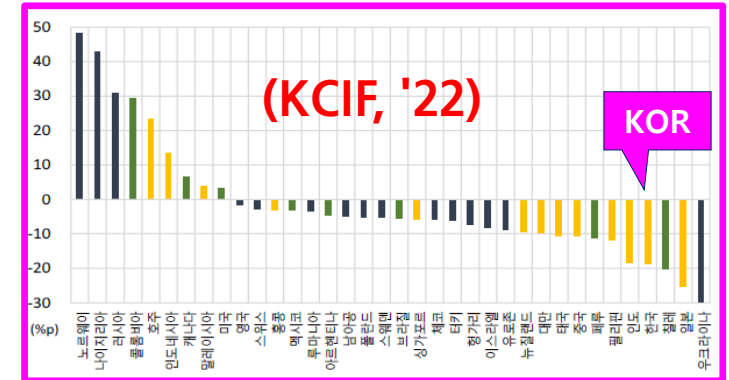
급변하는 세계경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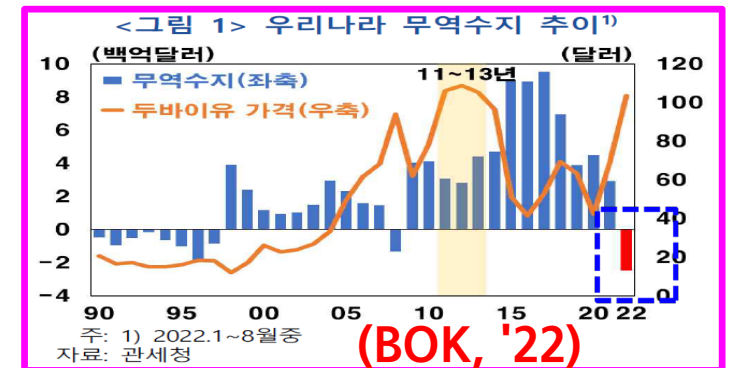
제조업 재고 증가, 가동률 하락



교역조건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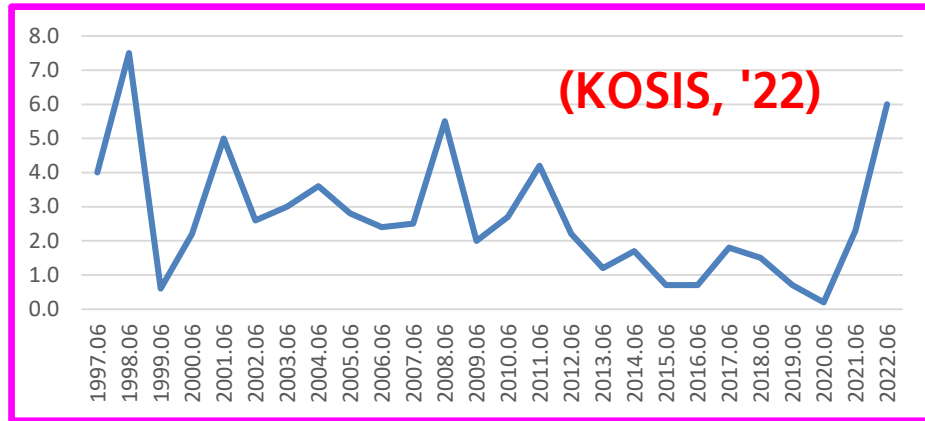


고환율에도 이례적 무역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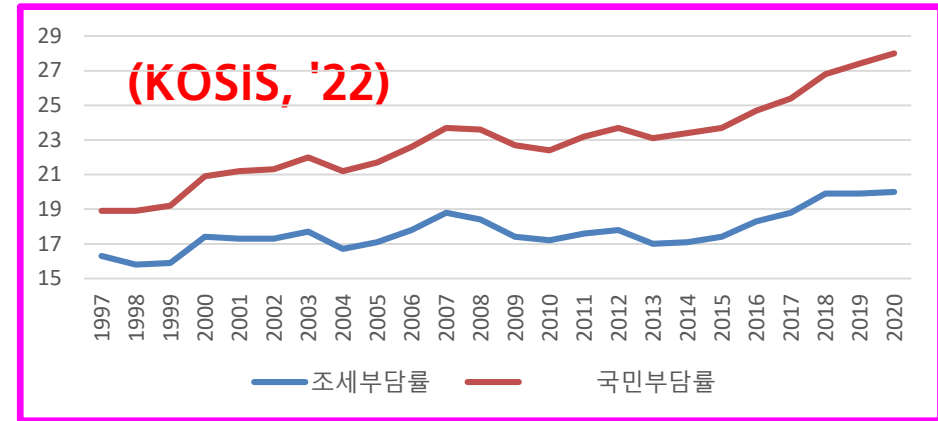


2. 민생고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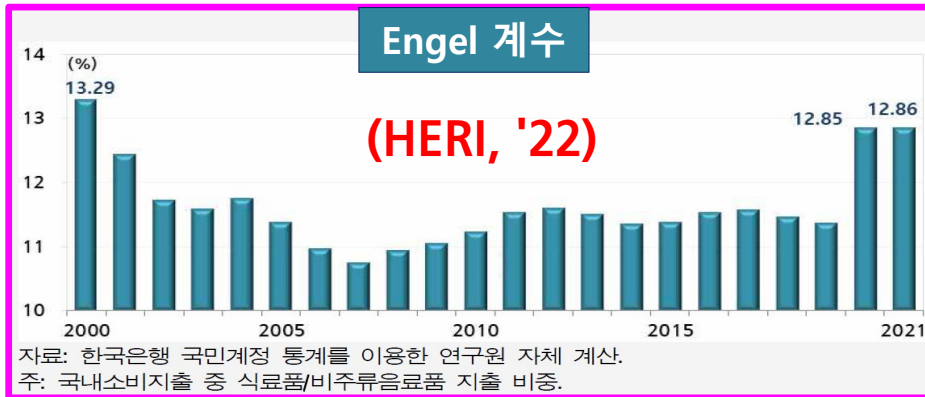
물가상승률: '98년 후 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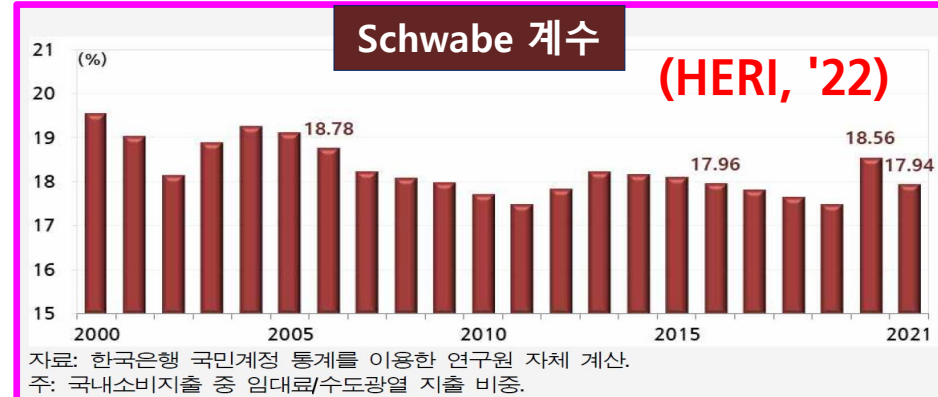
조세와 국민부담: 역대 최고



식품/소비 비중: '00년 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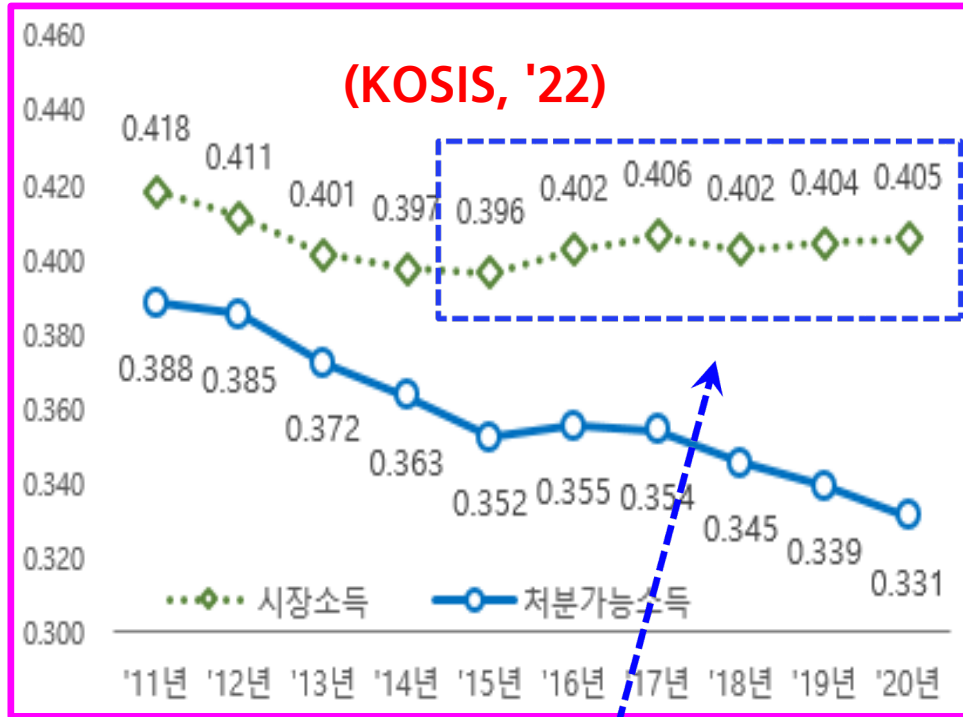


(임대료+광열비)/소비: '05년 후 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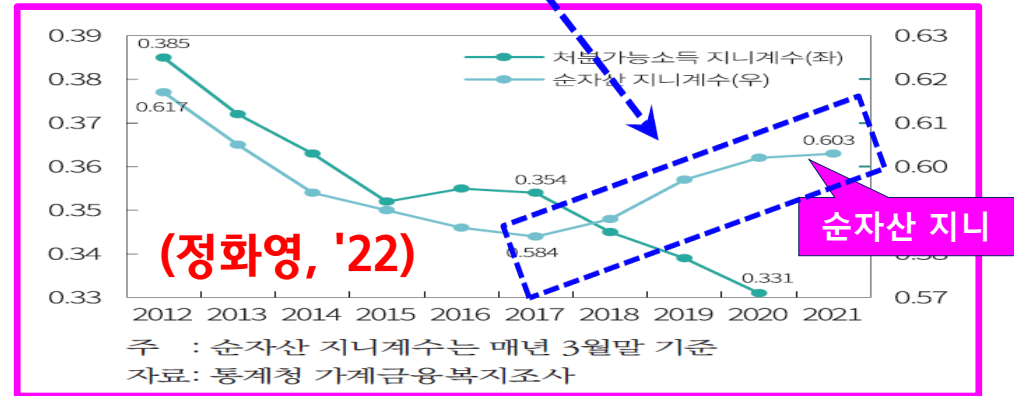
3. 격차 확대(I): 시장 소득과 자산

시장 소득 분배는 답보/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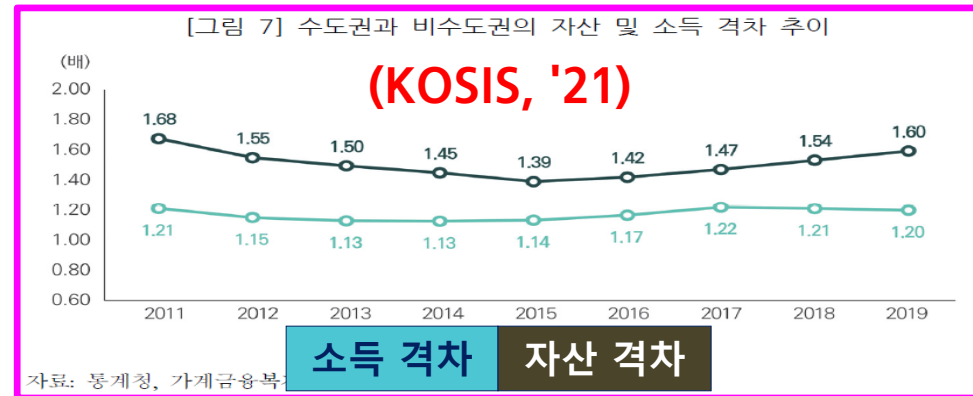


- ✓ 정부 과잉 개입으로 민간 일자리는 줄고, 재정 일자리와 복지 수급자만 늘어난 결과

줄어들던 자산 격차 확대 추세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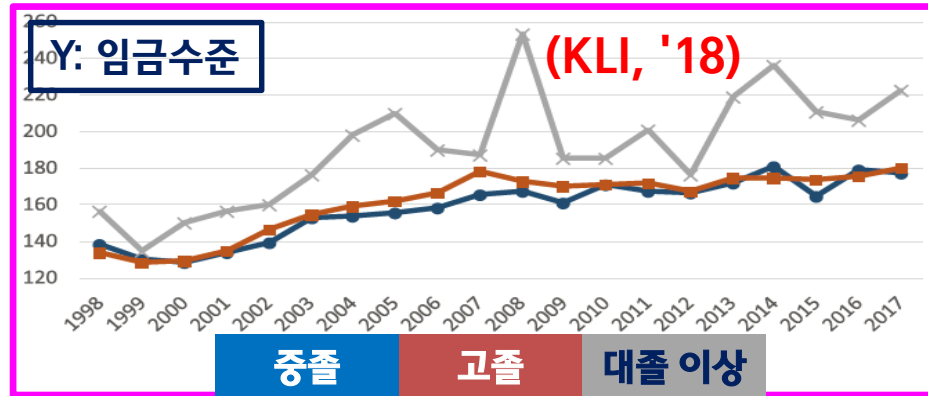


수도권 vs. 지방의 자산 격차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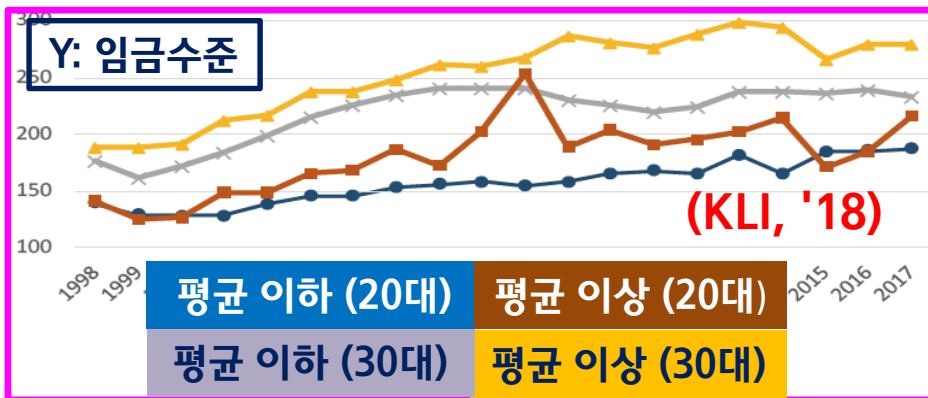


3. 격차 확대(II): 계층 대물림과 한계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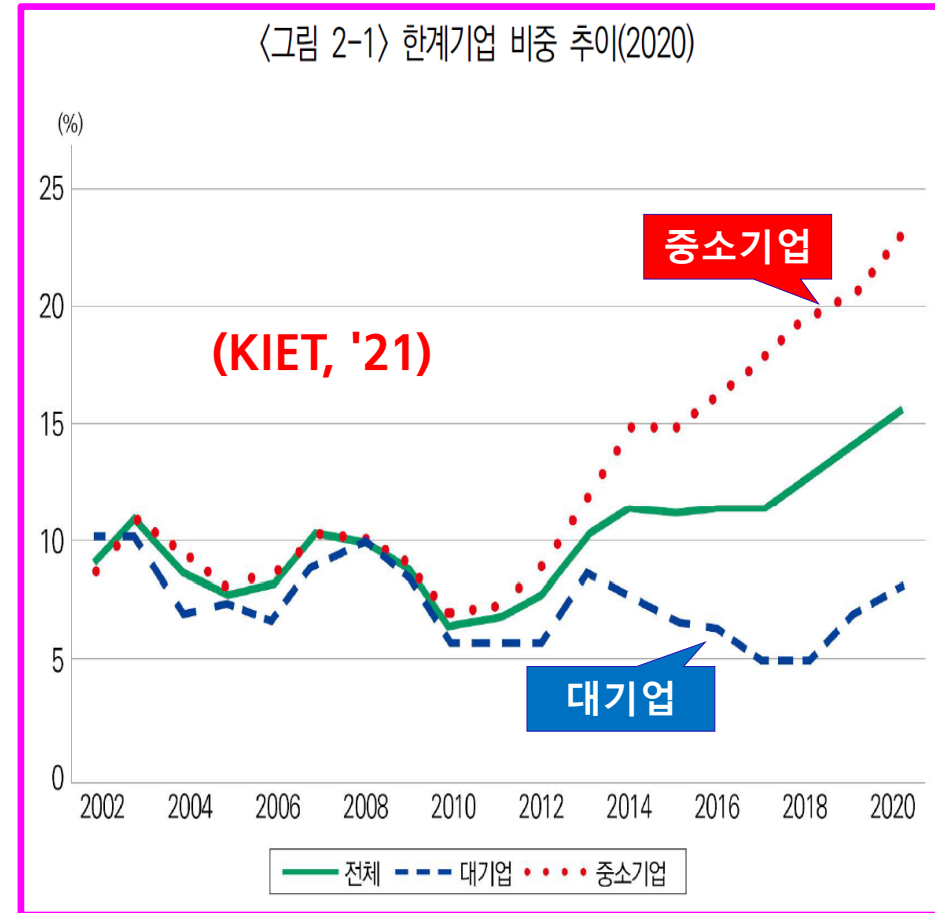
아버지 학력과 20대 임금



가구 소득계층과 20~30대 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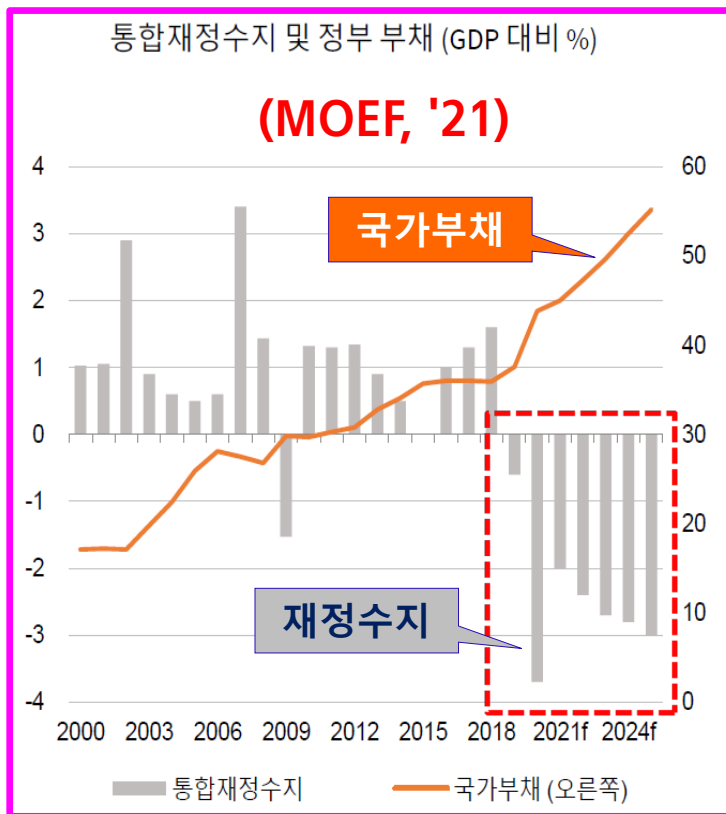


한계 중소기업 비중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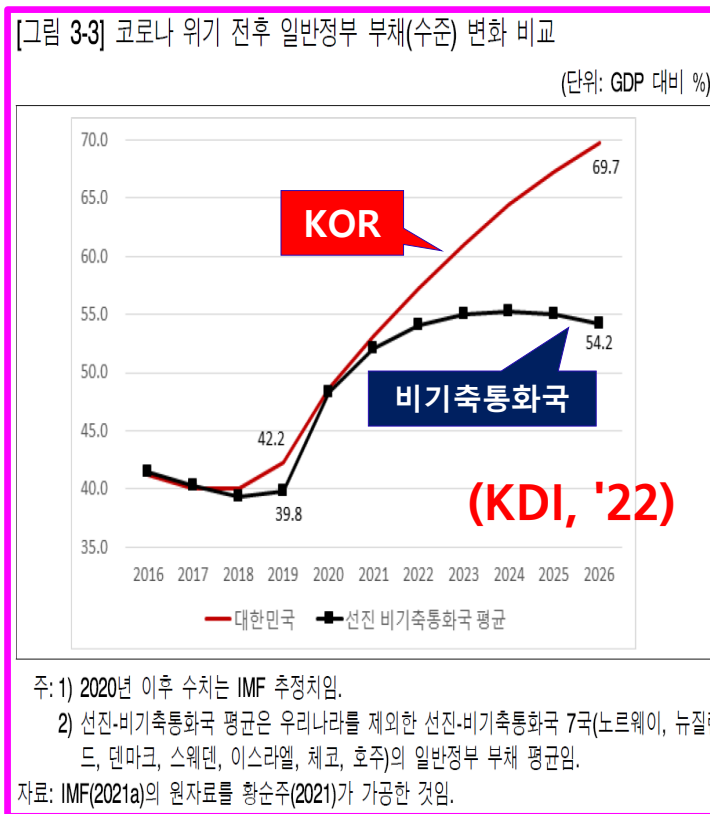


4. 정책 여력은 제약(I): 악화 일로의 재정건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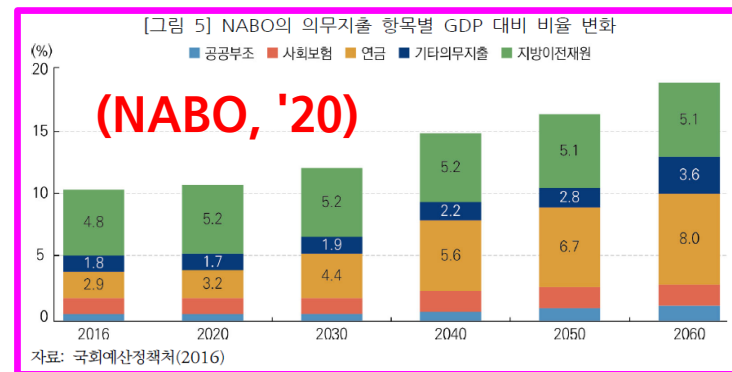
재정은 만성 적자로 전환



코로나 전후 정부 부채 변화



의무지출비율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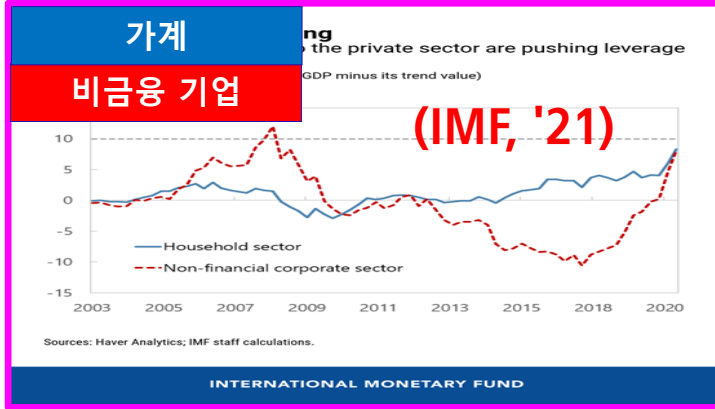
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락



➤ GDP 대비 국가채무가 '10년 30.8%에서 '25년 58.8%로 두배 가까이 급상승

4. 정책 여력은 제약(II): 민간 부채도 부담

민간 신용 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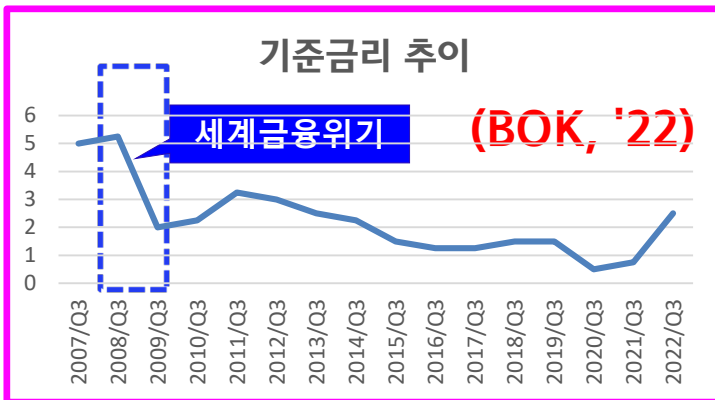
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 급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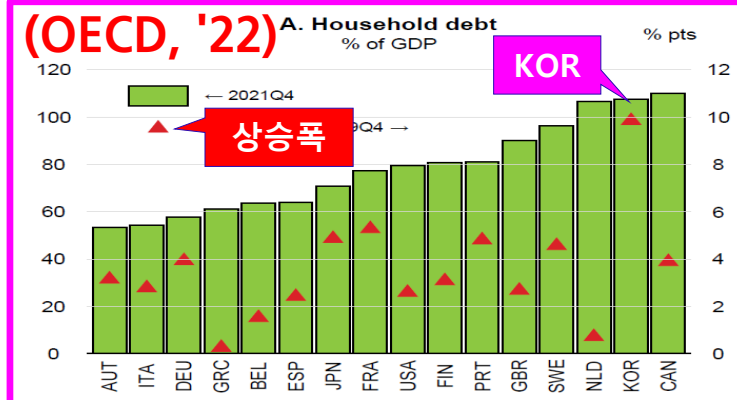
기업 대출의 用途 악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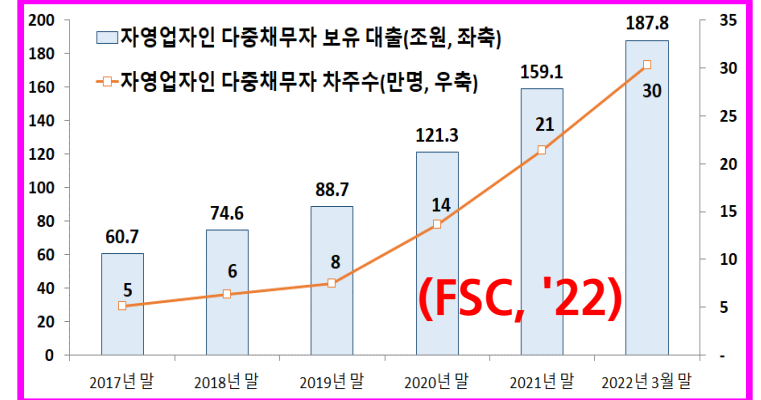
금리 인상 불가피



코로나 이후 가계부채 상승폭 최고



다중 채무 개인사업자 급증



I **격랑 속 우리 경제**



II **앞으로가 더 문제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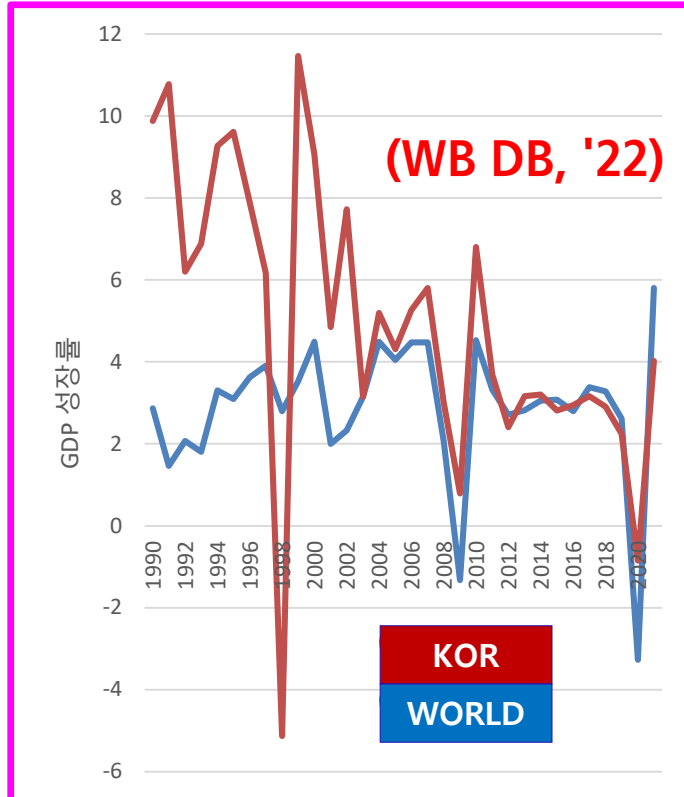
III **걸림돌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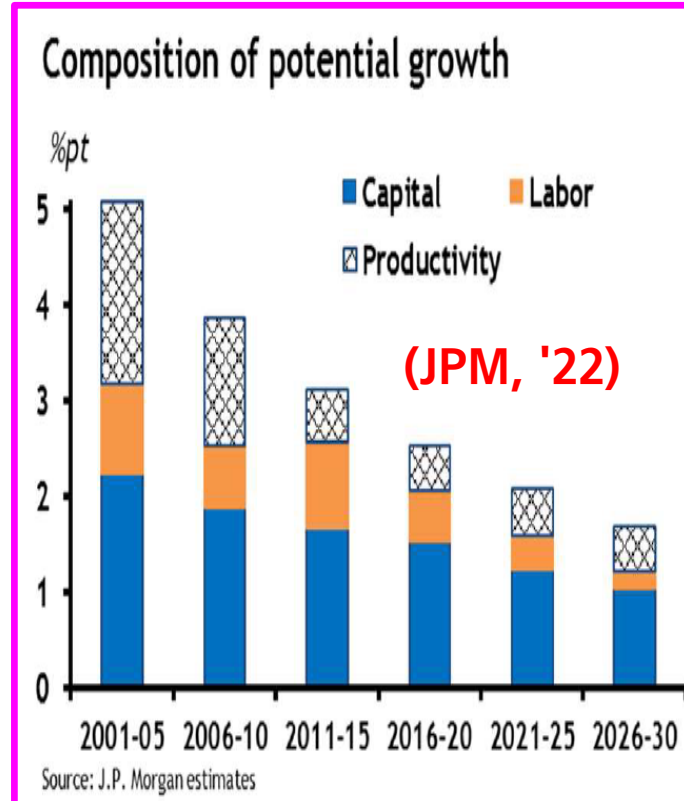
IV **정공법은 구조개혁**

저성장 기조 고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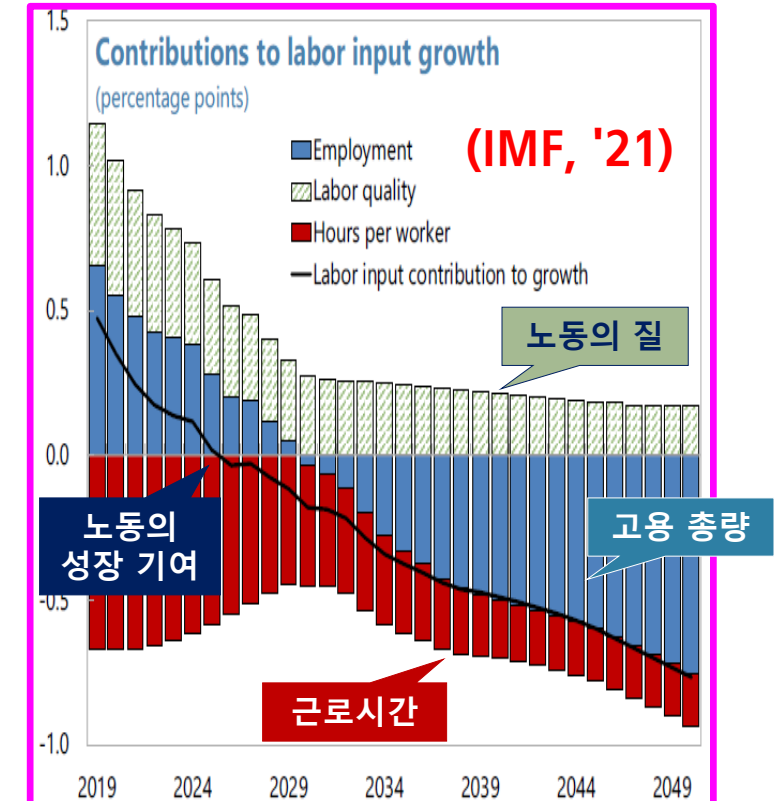
성장률이 세계경제에 근접/추월



잠재성장률 꾸준히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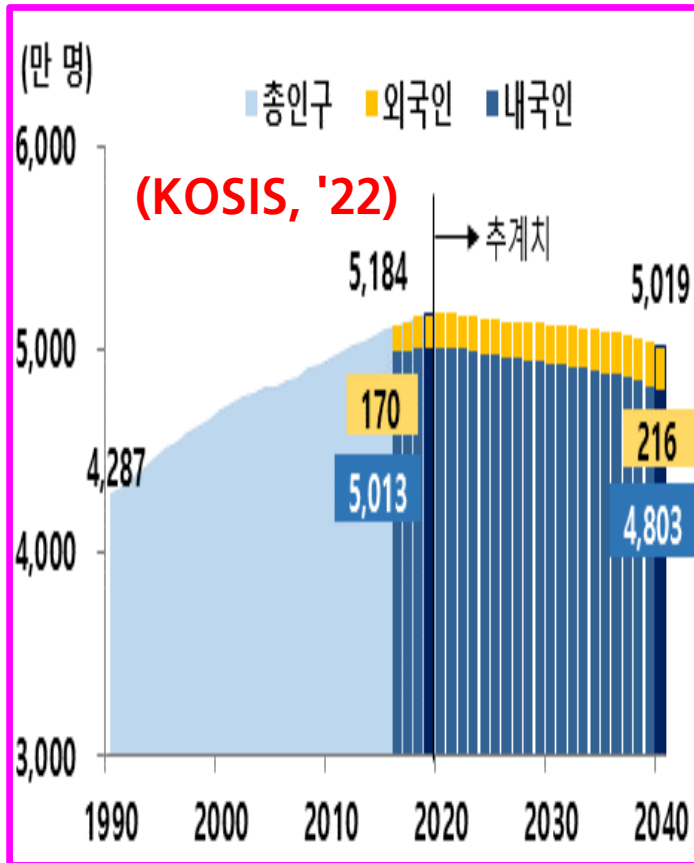


노동의 성장 기여도 곧 (-)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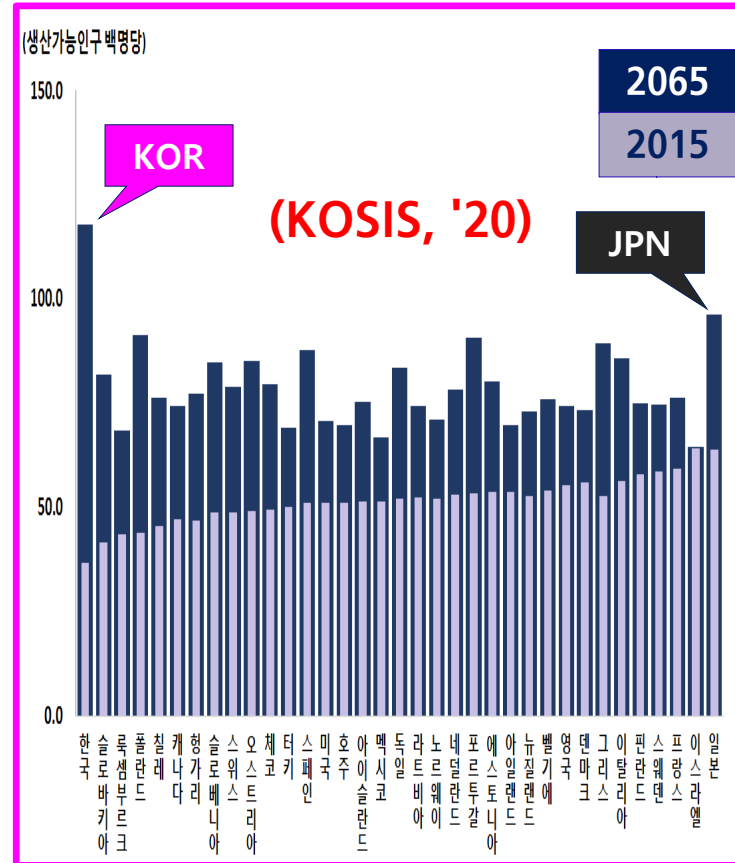


1. '인구 배당' 희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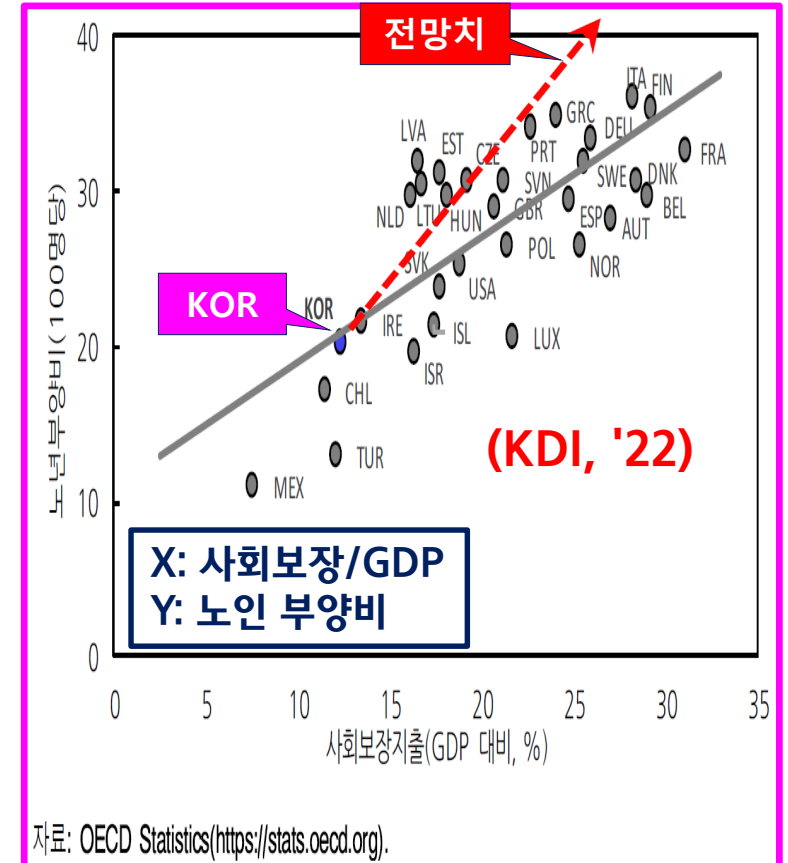
총인구 감소



(노인+아동) 부양비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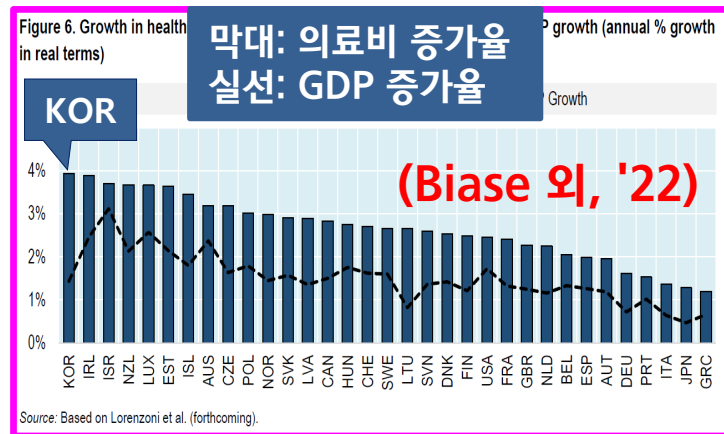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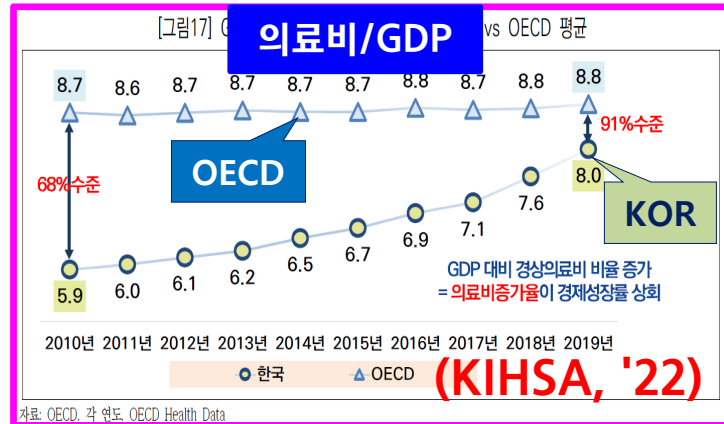


부양비와 (사회보장/GDP) 비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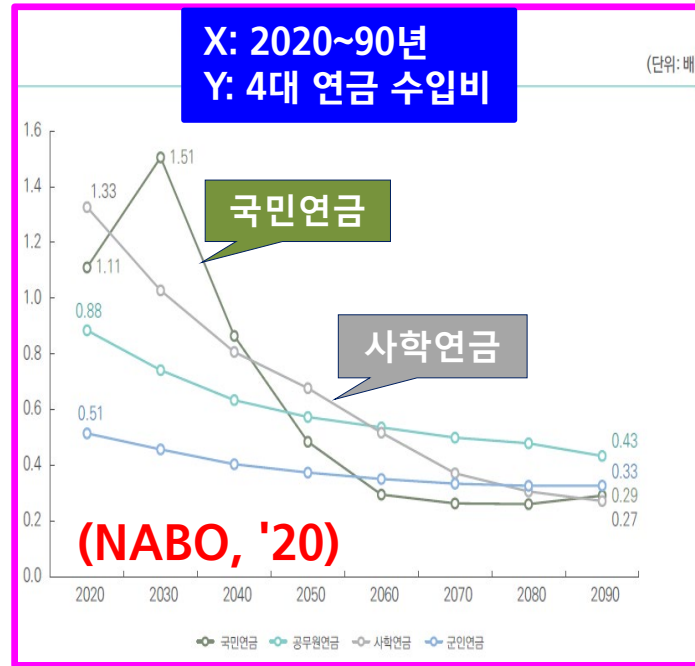


고령화/핵가족화 → 성장 둔화, 분배 악화, 재정압박 가속

의료비 부담 가중



공적 연금 건전성 악화



1인 세대 점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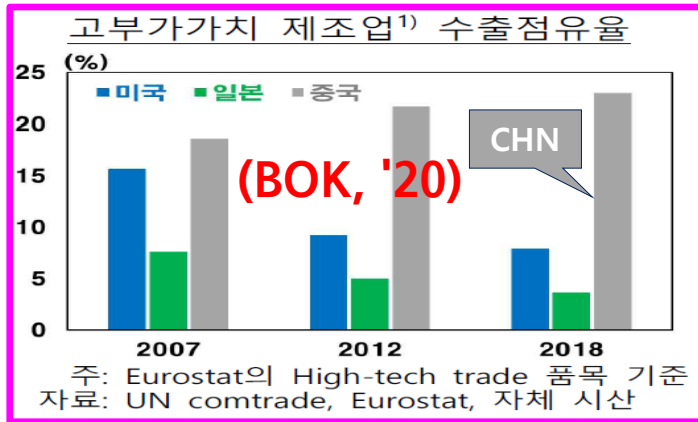
✓ 가족의 힘(美): 근로 윤리, 책임/자조, 저축 동기 (US SCF, '19)

➤ 백인 가구 순자산: 흑인 가구의 10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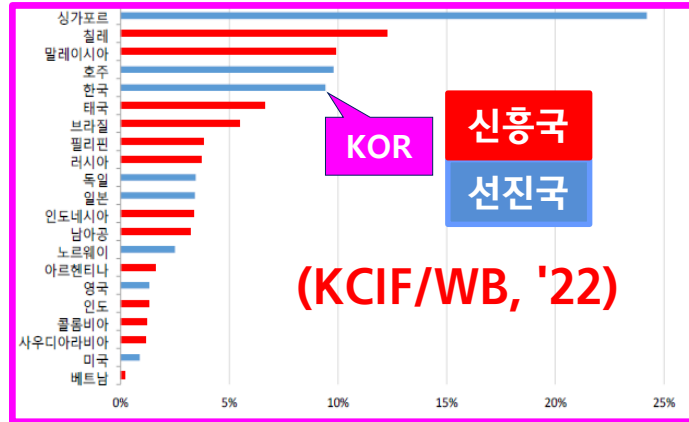
➤ 백인 1인 가구 순자산: 흑인 有배우자 가구의 1/2

2. 중국의 추격/추월 → 제조업 경쟁력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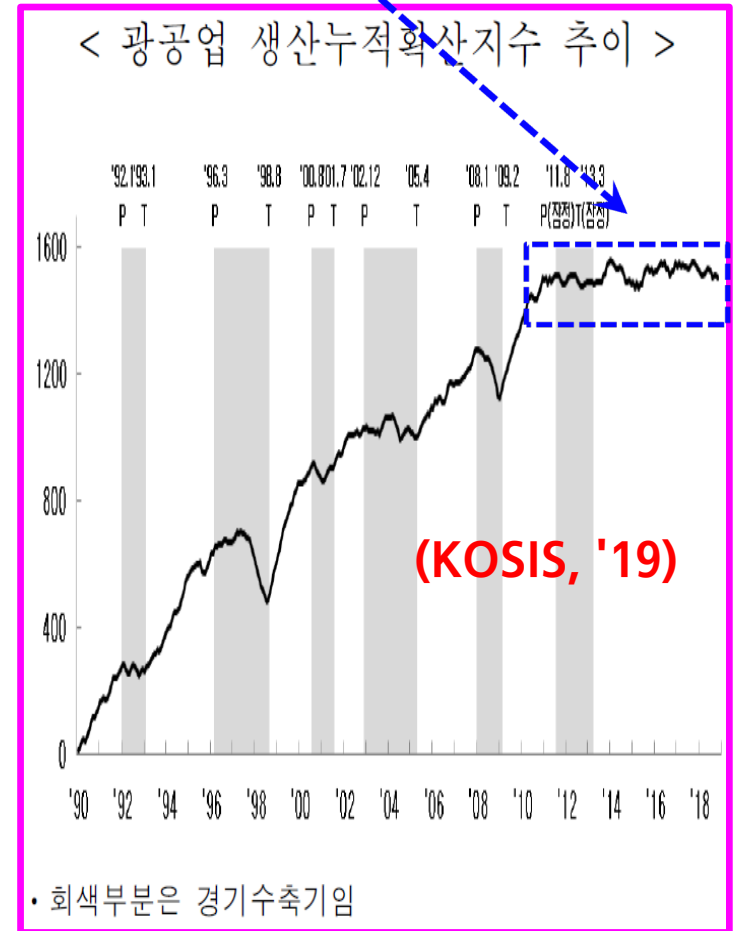
중국 제조업 급부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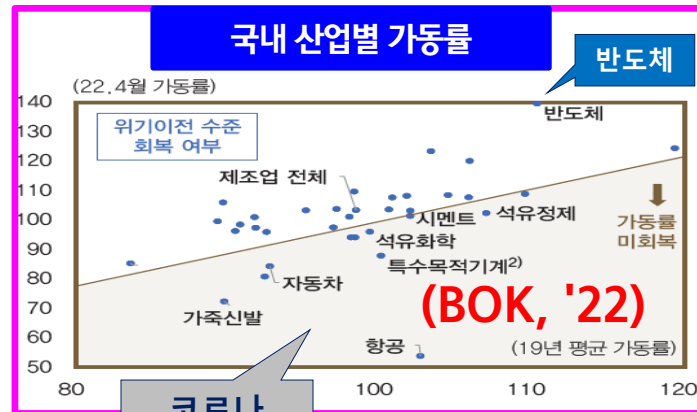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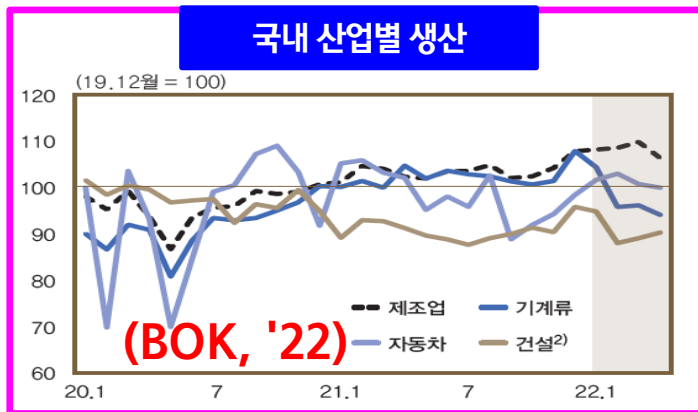
한국의 중국경제 의존 과도



광공업 생산 역량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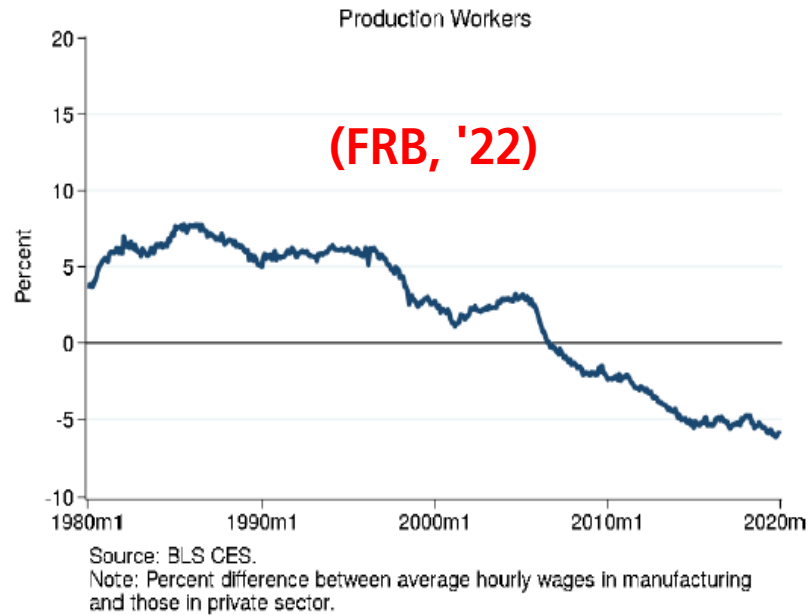


반도체 착시; 자동차/기계/건설 등은 '19년 수준에 미달



전성기를 지난 제조업 (美)

제조업 임금 프리미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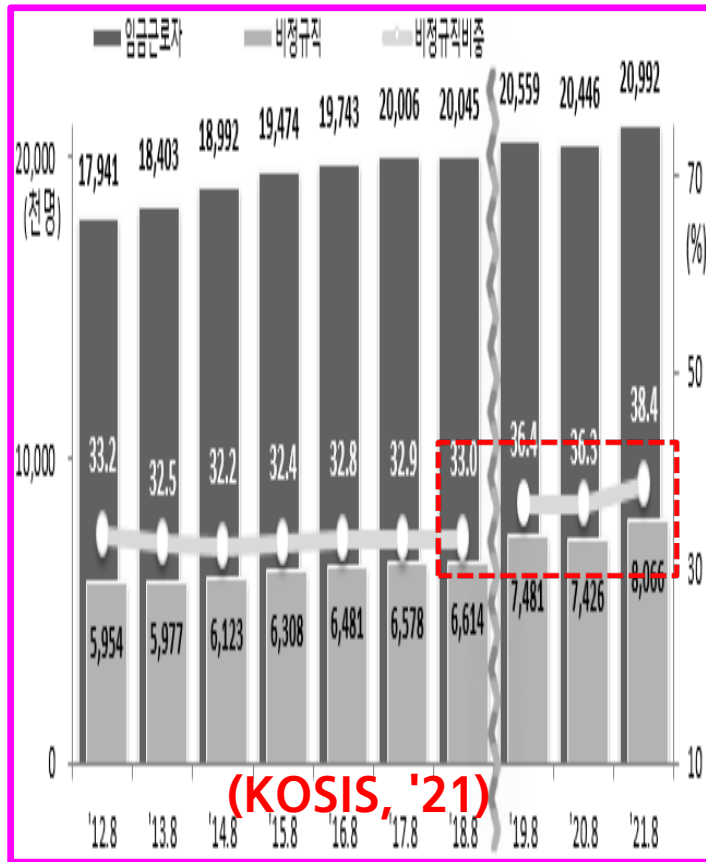


제조업 근로시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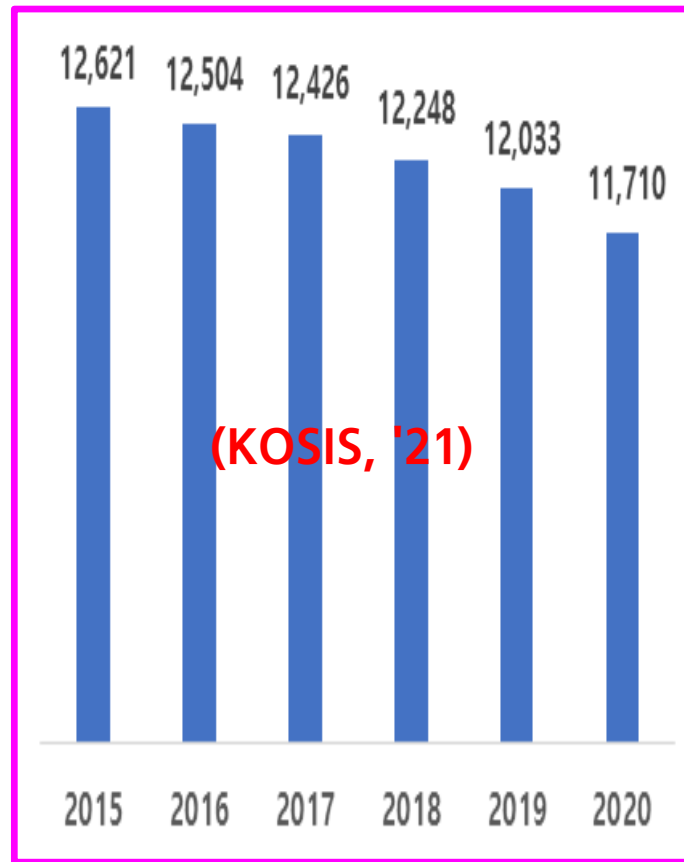


경제활동 참가는 활발하나 괜찮은 일자리는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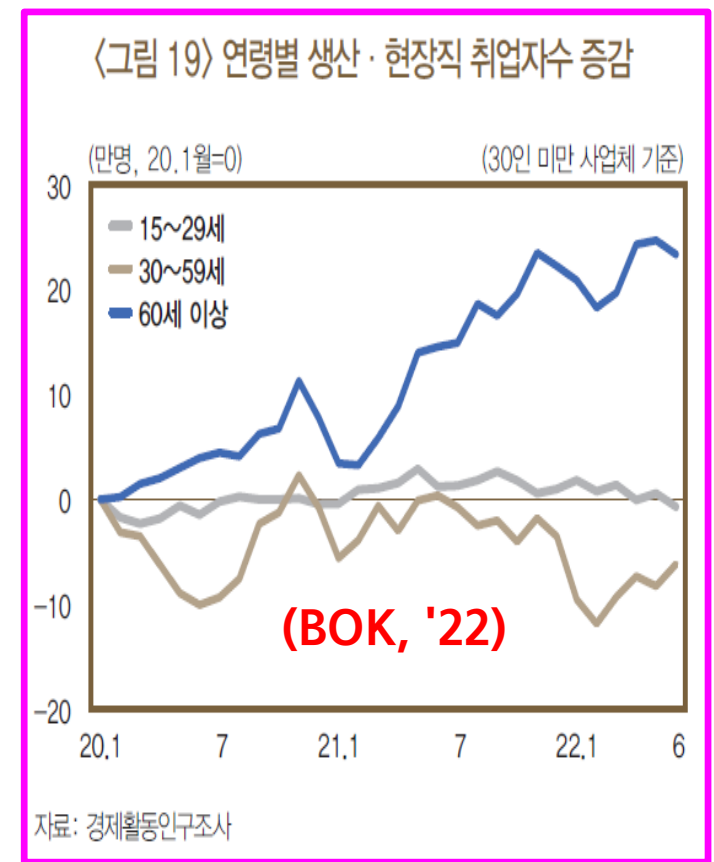
비정규직 비중 점증



30/40대 취업자 감소



생산직은 60/70대 중심 증가



I 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 앞으로가 더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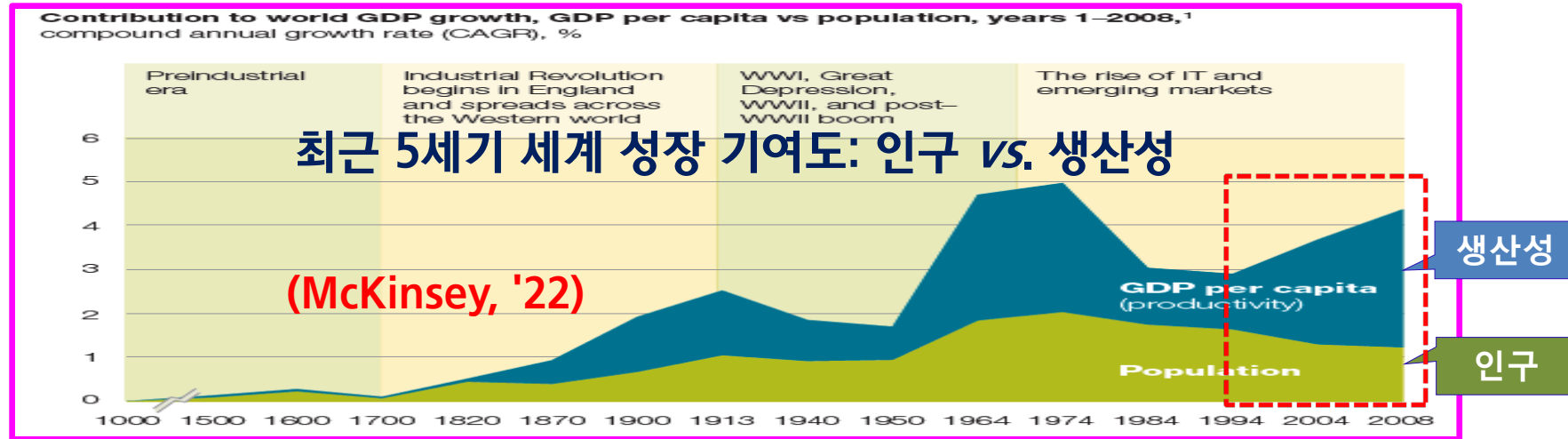


III 걸림돌



IV 성공법은 구조개혁

1. 민간부문(I): 인적 역량 정체 → 4차 산업혁명 추동에 애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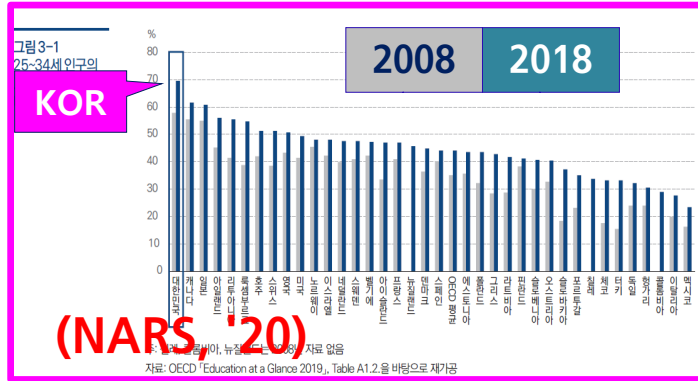
- 주입식 교육, 평가에 대비하는 '표충 학습' → 창의력 결핍
- 시장 수요와 고등교육 Mismatch → 필수 역량과 인적 역량 간 괴리
- 上命下服, 先例 답습, 책임 회피, 年功序列 문화 → 혁신 저해
- 장시간 근로와 부실한 평생학습 → 인적 자본 갱신/축적 미흡

청장년층: 학력/교육비는 최상위권 vs. 역량은 중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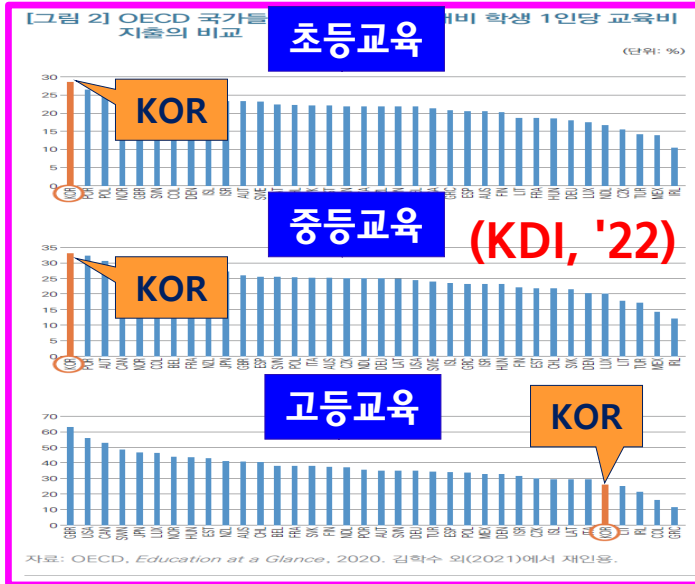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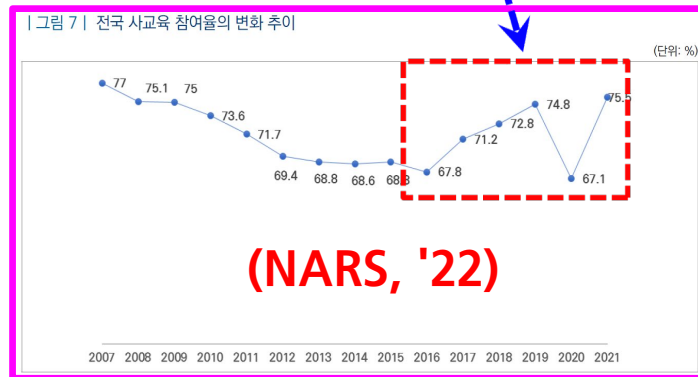
청년층 고등교육 이수 으뜸

1인당 초/중등 교육비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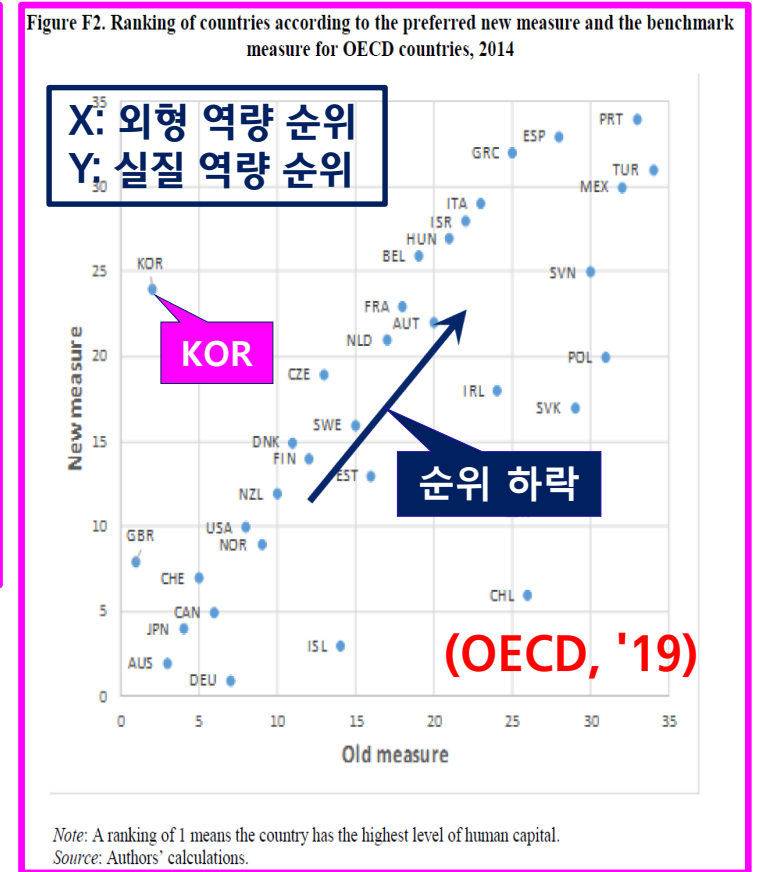
외형 vs. 실질 역량의 간극



사교육 참여율 상승세 반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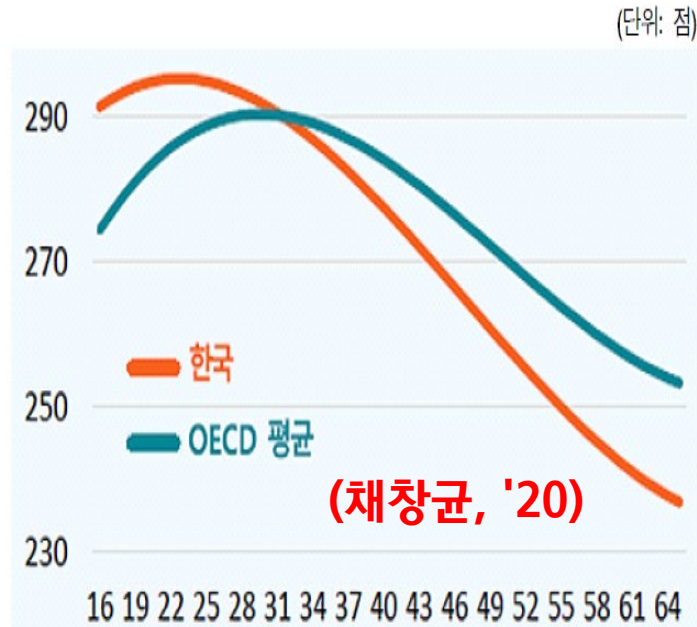
✓ 경직된 교육재정교부금
→ 초/중등교육은 과잉,
고등교육은 과소 투자



나이 들수록 역량 급락 & 직장/평생학습 취약

연령별 PIAAC 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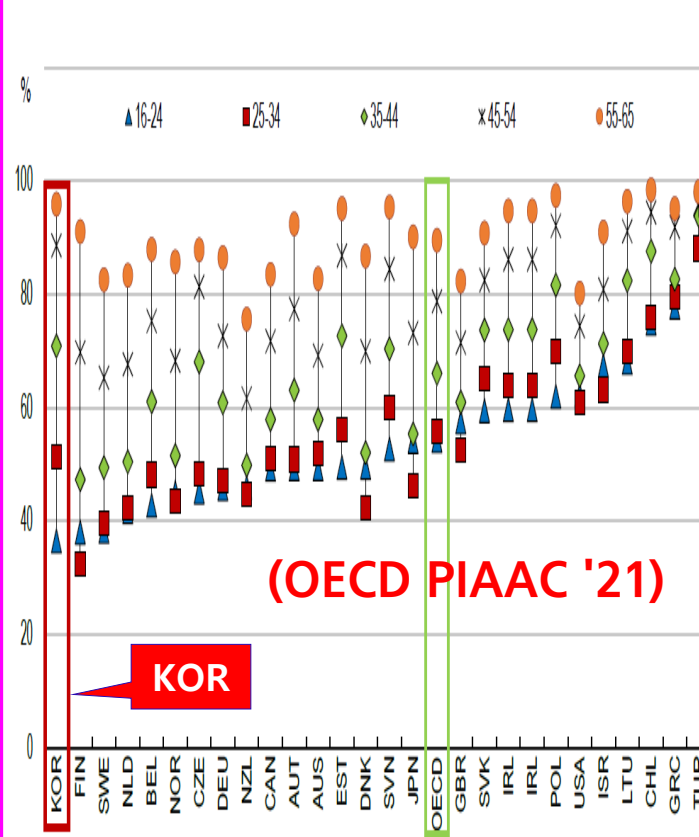
[그림 3-7]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(16~64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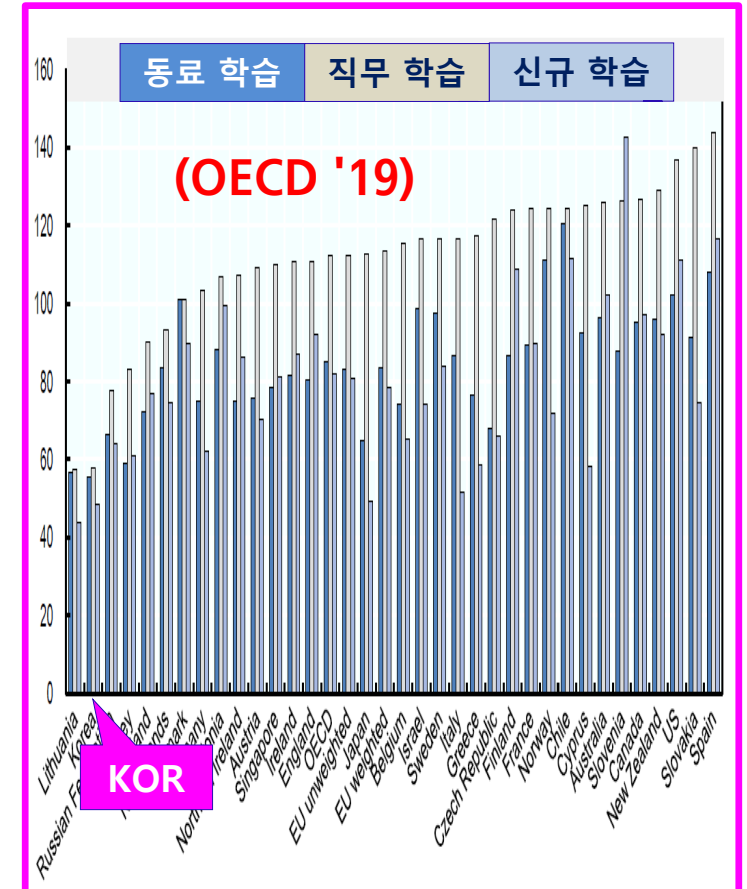
주: 역량은 언어능력(literacy)으로 측정하였으며,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(채창균 외, 2018).

연령별 디지털 미숙도

Share of adults with limited or no digital skills, by age group, 2012 or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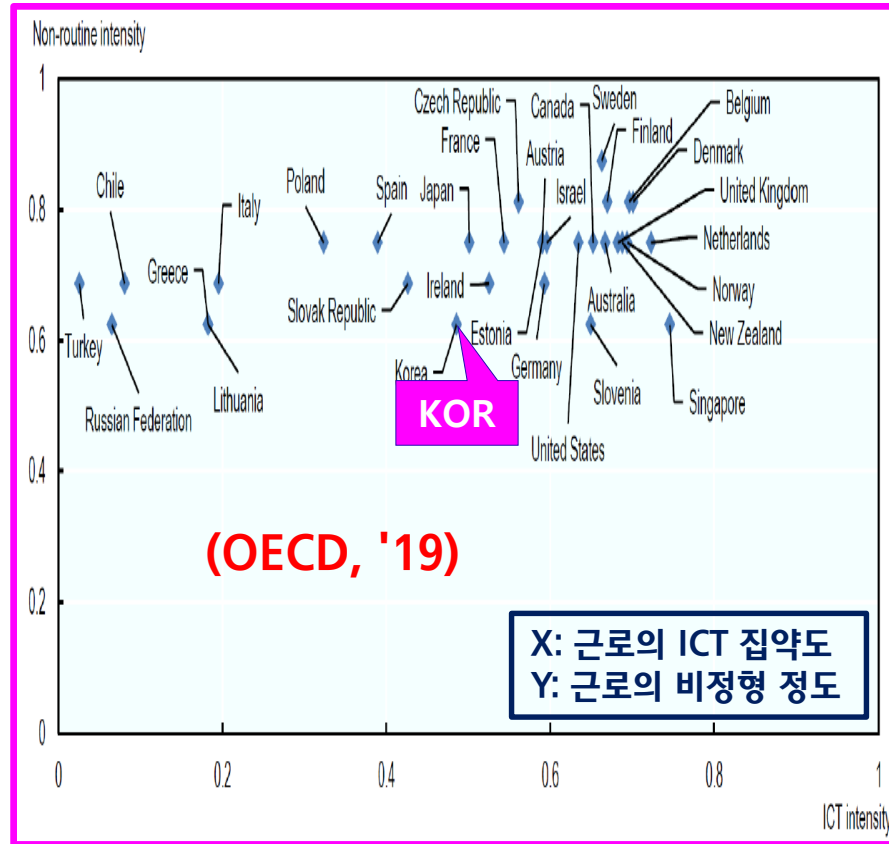


직장 학습 유형과 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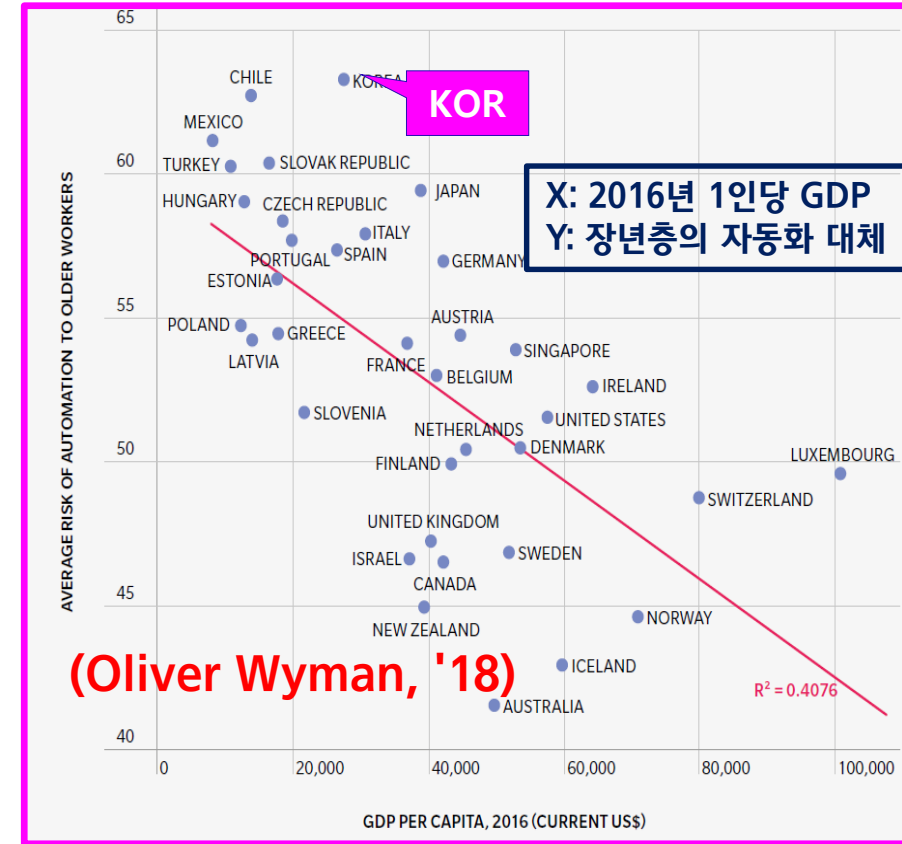


어정쩡한 숙련도 →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 농후

근로 난이도가 선진국 평균에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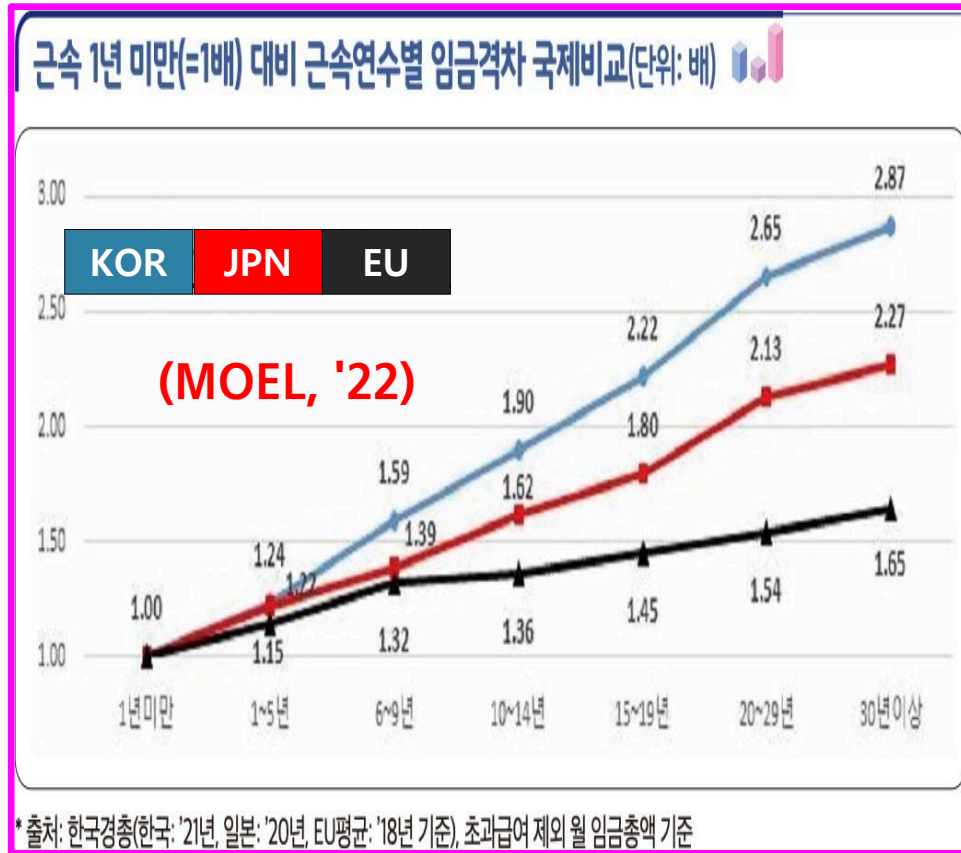


장년층의 자동화 대체 위험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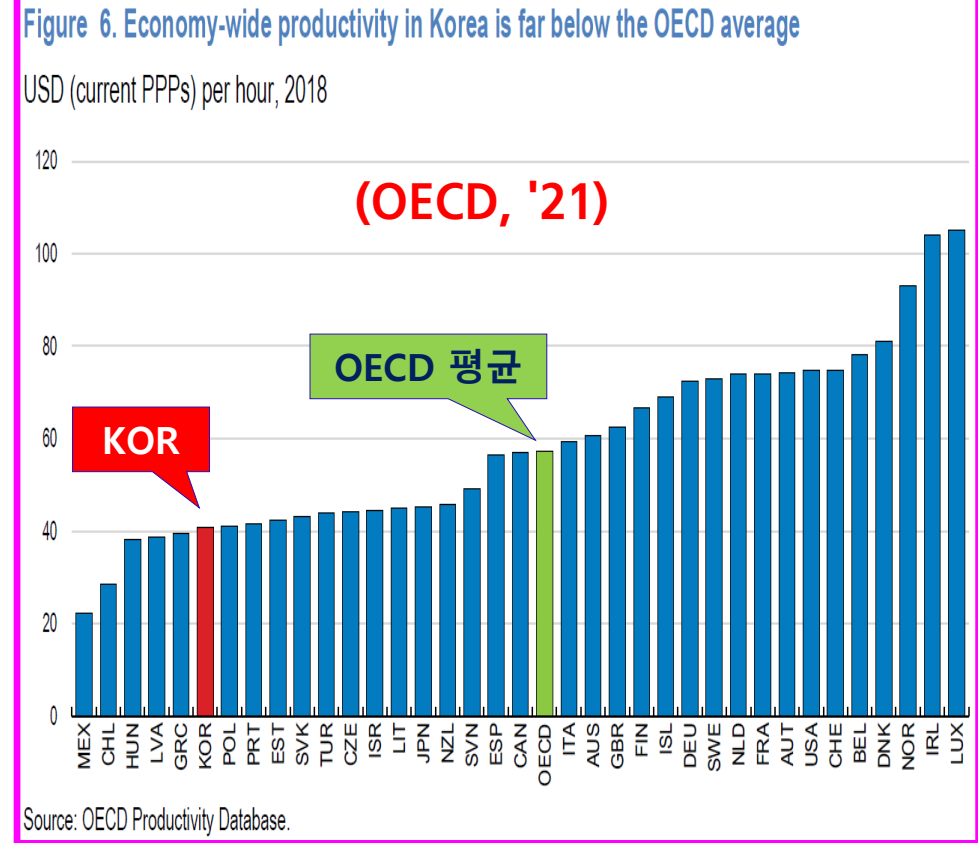


뿌리 깊은 연공서열과 낮은 생산성

연공(호봉)급에 따른 임금격차 상당



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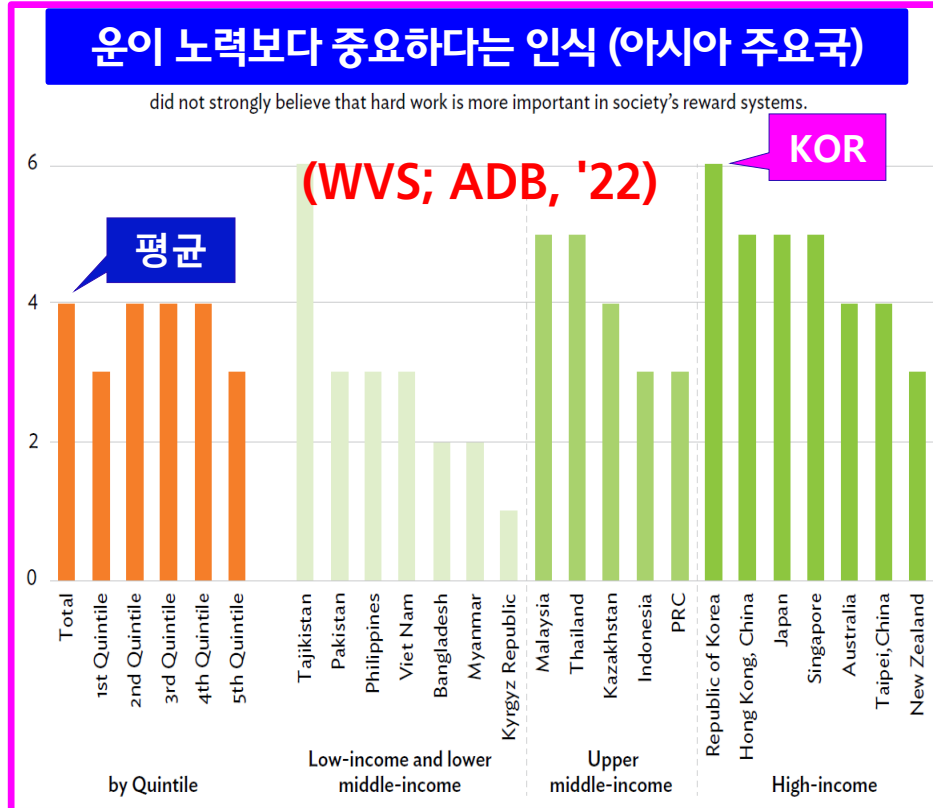


1. 민간부문(II): 갈등 증폭, 규율 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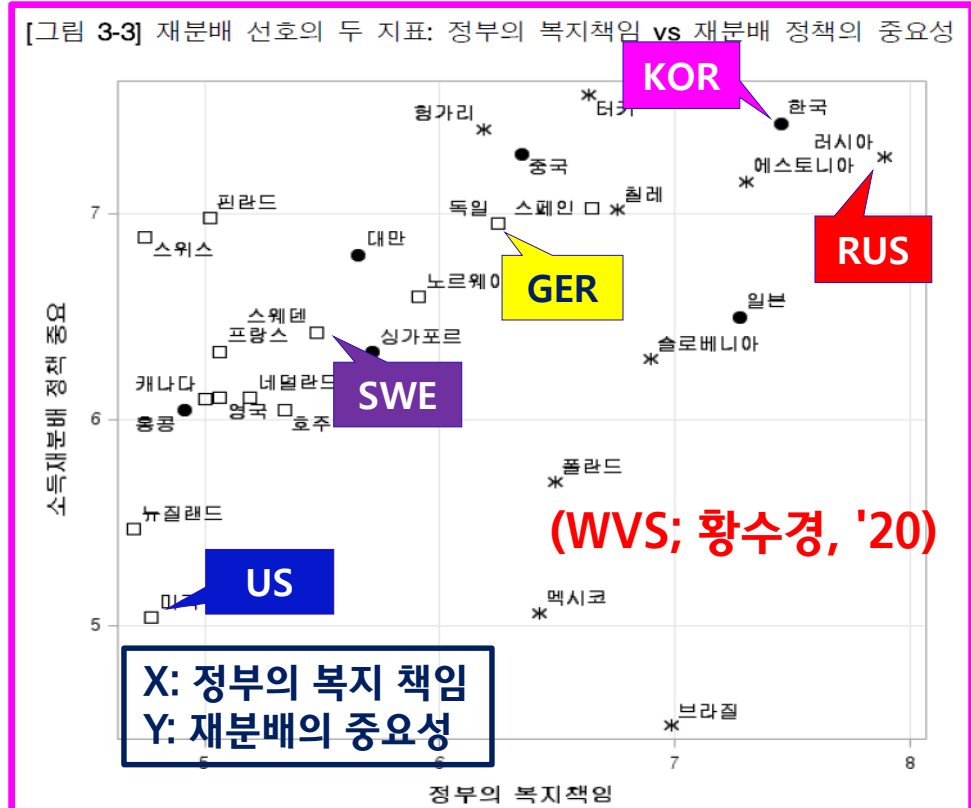
- 이념至上의 원리/種族주의 발호 → 과학/상식/규범을 압도
 - ✓ 환경: 인천공항, 千聖山 도롱뇽, 청계천, 4대 강 淤, 脫원전, 국립공원 케이블카
 - ✓ 反美: 장갑차 사망, 미군 기지 이전, 광우병, FTA, THAAD 전자파
 - ✓ 反日: 위안부/징용 사과/배상, 敎學社 교과서, GSOMIA, 토착 왜구論
- '옹호 연맹'의 거부권 만연 → 합의/타협 至難
 - ✓ 강성노조: 불법/폭력 파업/점거/현수막/소음, 非노조원 탄압
 - ✓ 서비스산업의 문턱/울타리에 편승한 기득권: 원격진료, 차량 공유, 교육 개방
 - ✓ NIMBY/PIMFY/NOOMP: 방폐장, 송전탑, 반도체공장, 동남권 신공항, 해군기지

남/사회/제도 탓 팽배, 자조의식 희박

운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



재분배 선호도 세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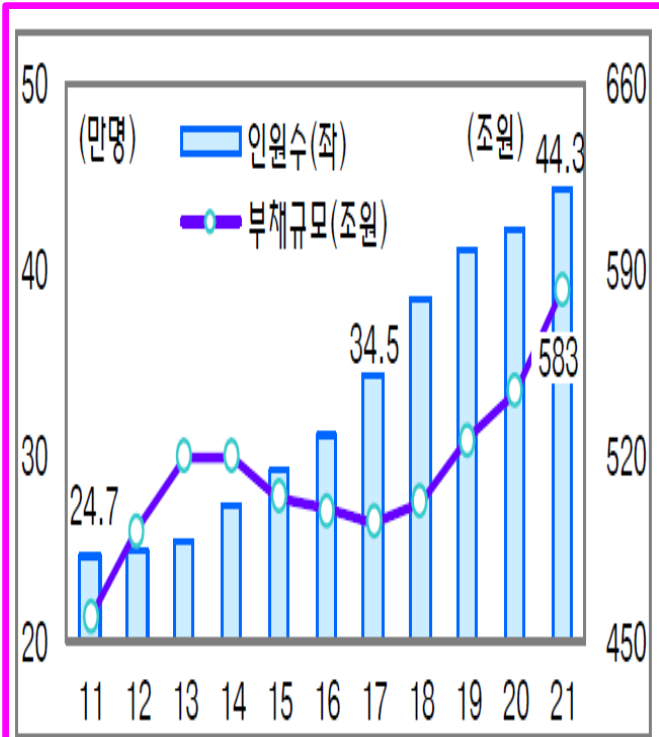


2. 정부(I): '큰 정부' 유산과 대중迎合 정치 → 민간 활력 위축

- 정부 만능의 '保姆국가' 풍조 득세: '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'
- '합리적 무관심'과 '불합리한 편견' 확대 재생산 → '정부 실패' 누적
 - ✓ 대증요법 난무: 반값 vs. 무상, 재난기본소득, 講師法, 정규직 전환, 분양가 上限
 - ✓ '抑强扶弱'의 편 가르기: 多주택자 종과세, 자사고 폐지, 부자 증세, 마트 휴무
 - ✓ 개혁과 허리 띠 졸라매기 주저: 연금/노동개혁, 재정 건전성 확립
 - ✓ 영혼 없는 공직자/국책연구원의 합리화/뒤치다꺼리
- 黨利黨略의 정쟁 → 정책 불확실성 고조, 정책효과 반감
 - ✓ 무조건 찬성/반대(여/야가 뒤바뀌면 번복): 한미 FTA, 제주 해군기지
 - ✓ 前任과 무리한 차별: 원전, 금산분리, 성과급, 4대 강, 신공항, 해외자원 확보
 - ✓ 하수처리장이 된 사법부: 세종시, 4대 강, 전교조, 국정교과서, 통상임금, 검/수/완/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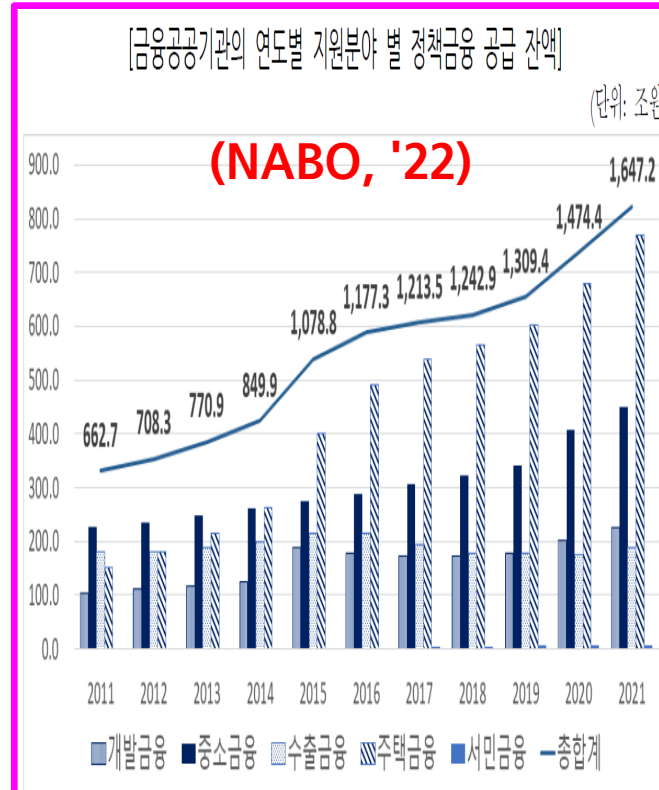
공공부문의 규모/역할 팽창

공공기관 인원과 부채 급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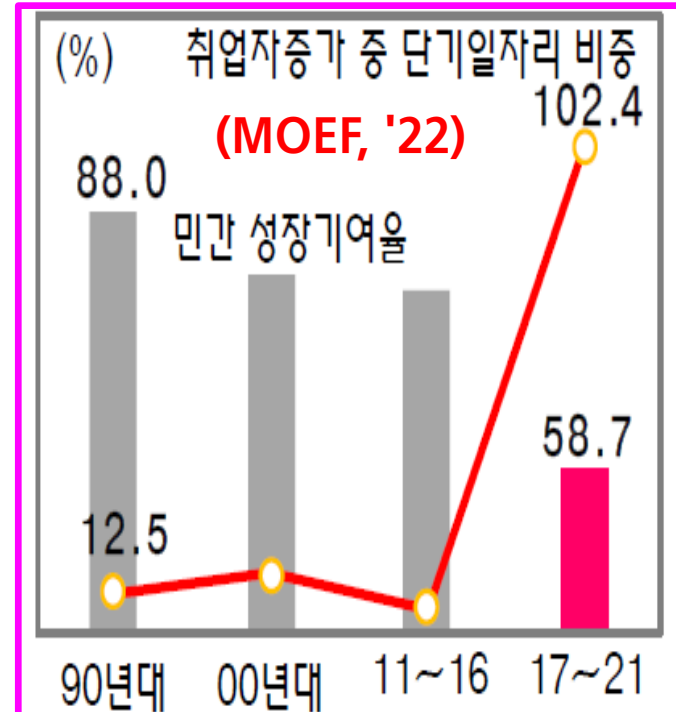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알리오 (MOEF, '22)

정책금융 급등



자료: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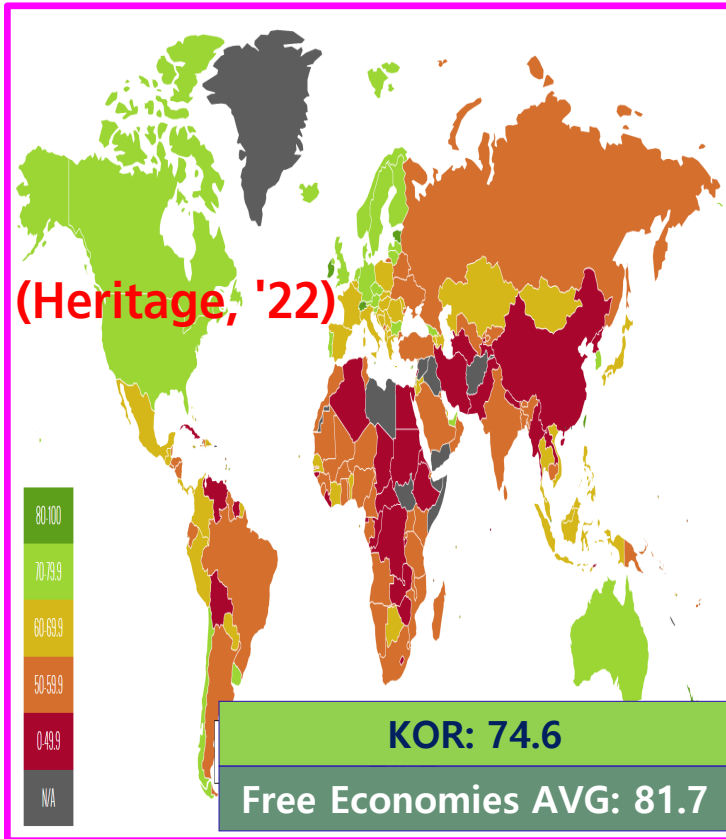
민간의 성장 기여도 하락



* 출처 : 한국은행, 통계청

과잉/획일 규제로 민간 활동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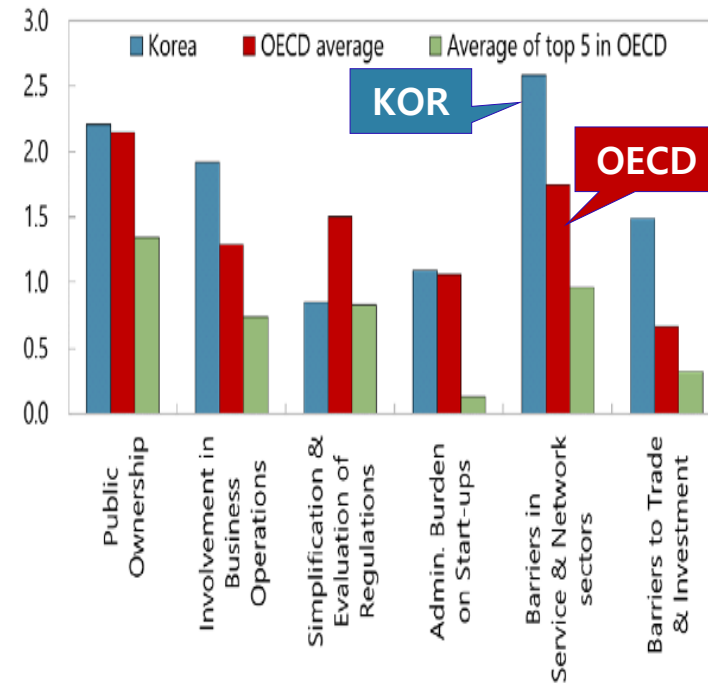
Heritage 경제 자유도



상품시장 규제 지수

Product Market Regulation (OECD, '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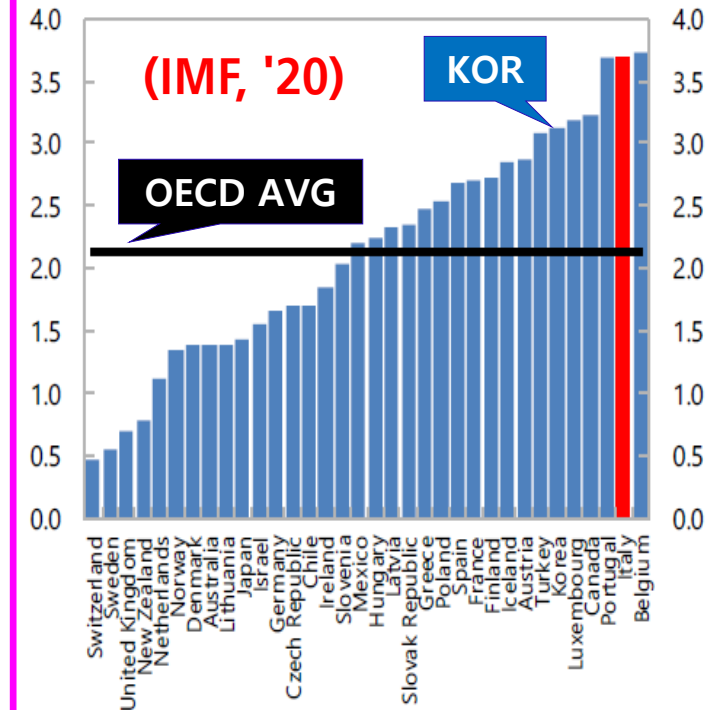
(Scale of 0-3; higher is more restrictive)



Source: OECD.

서비스산업 장벽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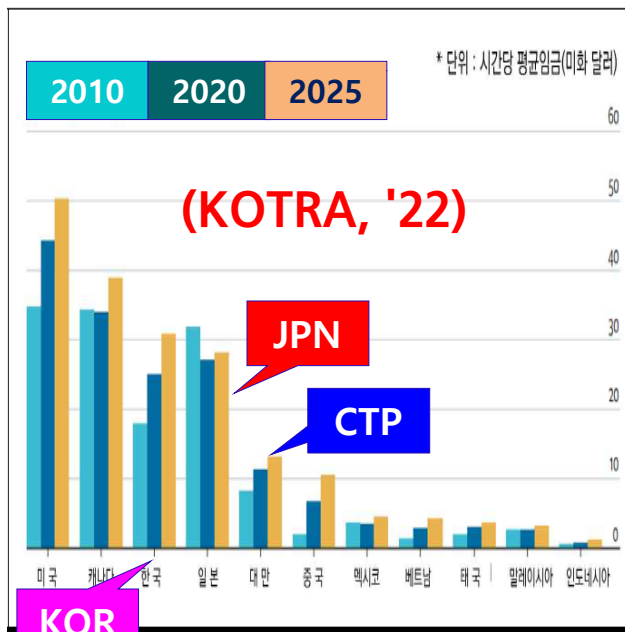
Barriers in Services Sectors (Range 06)



가파른 인건비 상승, 촘촘한 규제, 잦은 노사분규 → 일자리 해외 유출

주요국 제조업 인건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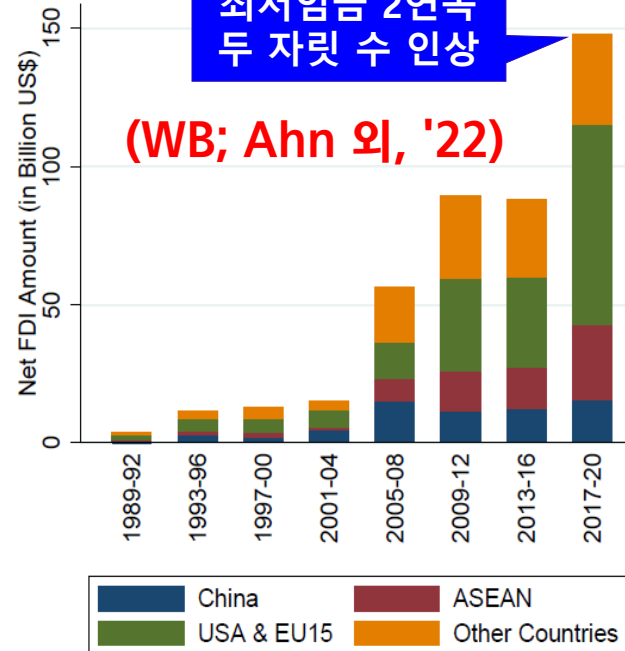
< 주요국 제조업 인건비 전망 비교 >



자료 :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

한국기업의 지역별 해외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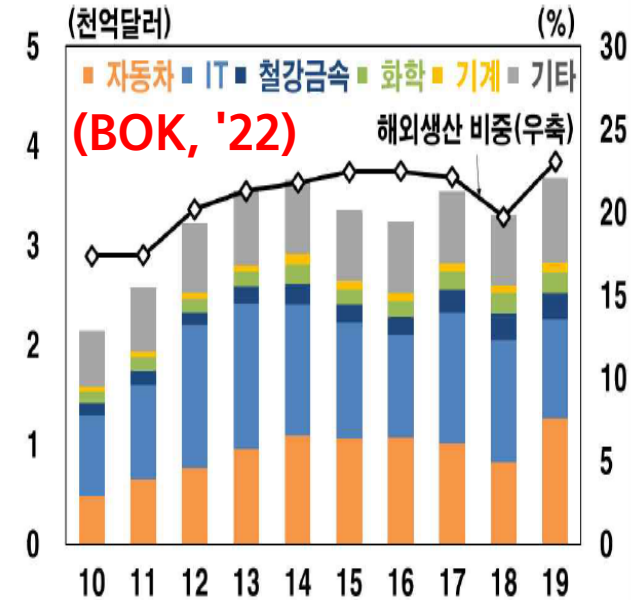
최저임금 2연속
두 자릿 수 인상
(WB; Ahn 외, '22)



(b) Net Foreign Investment Amount

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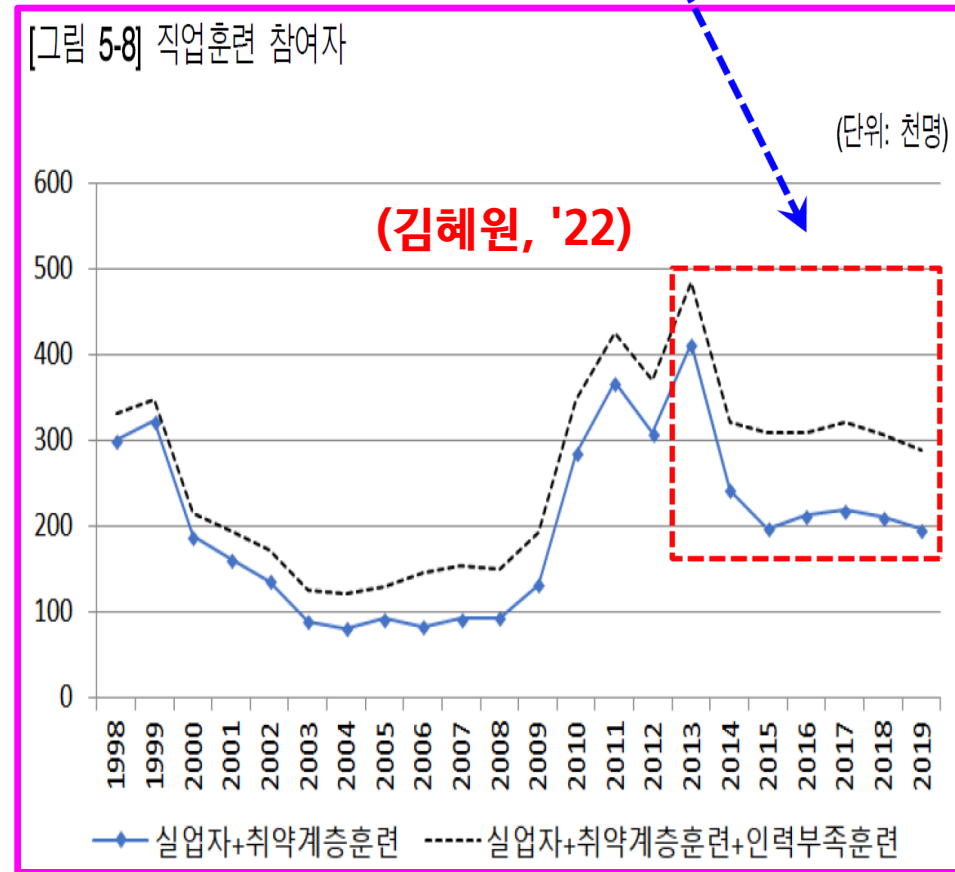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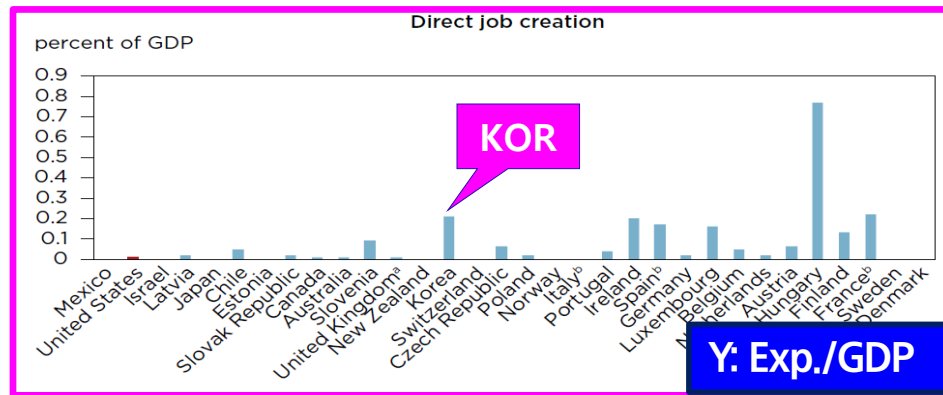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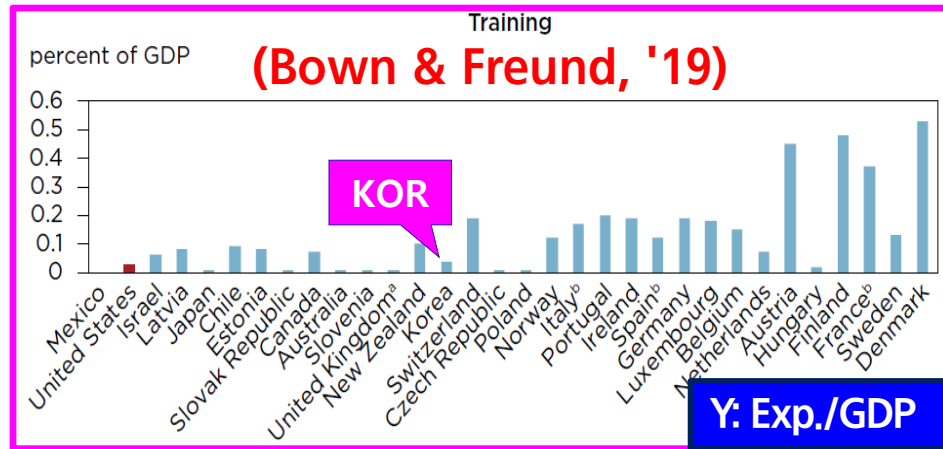
<그림 8> 제조업 해외생산액·비중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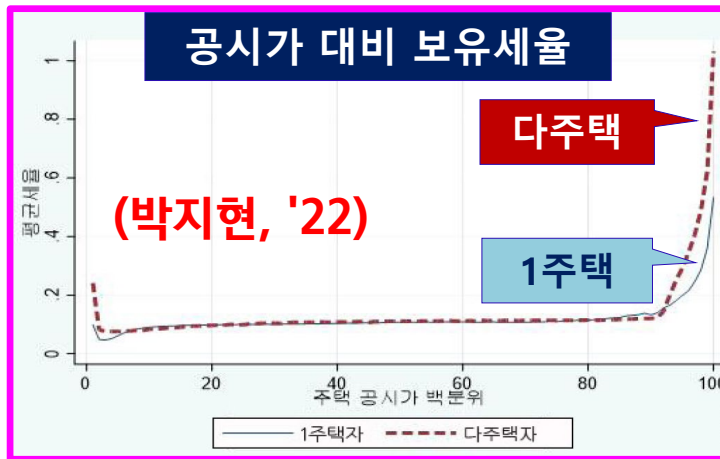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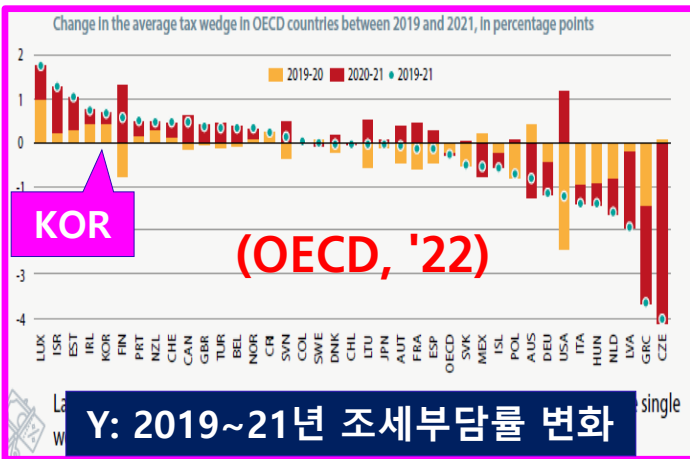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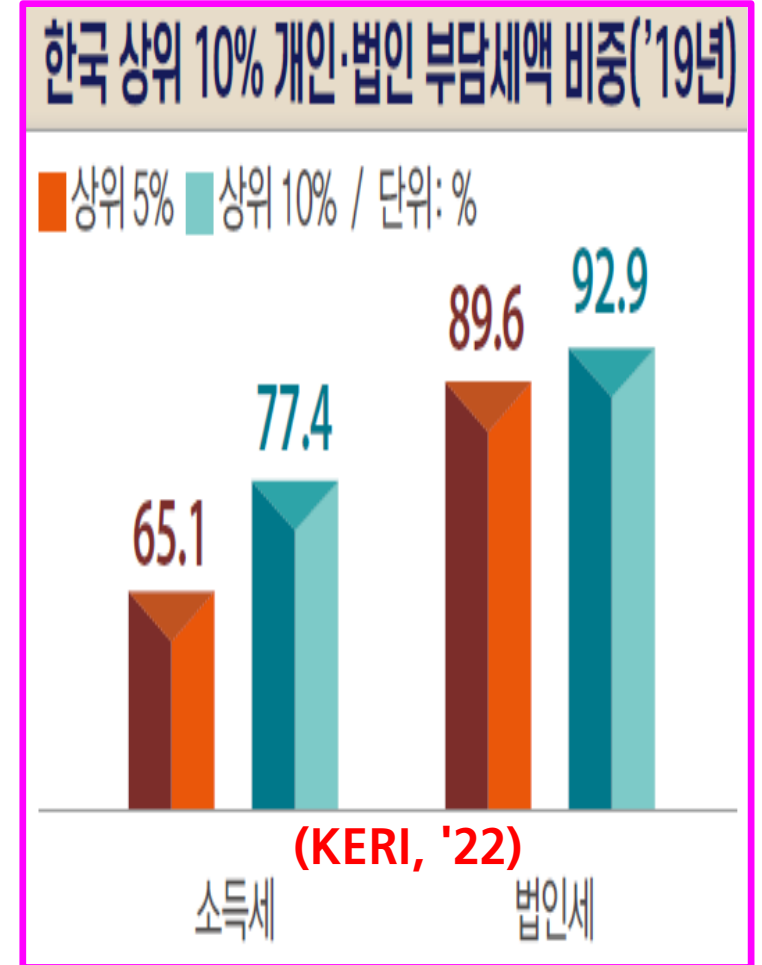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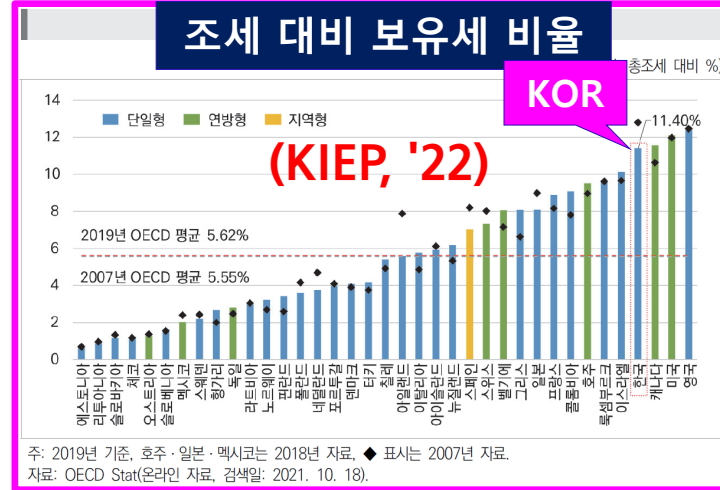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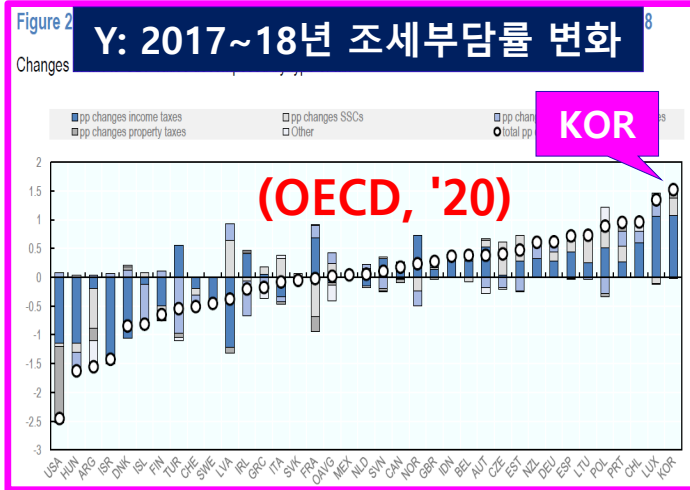
주: 1) 현지법인 매출/국내 및 현지법인 매출(제조업)
자료: 수출입은행, 통계청

재정의 시장 개입 가속

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흡(左上), 직접 일자리 창출엔 적극(左下), 직업훈련 참여자 급감(右)



조세(左)/보유세(中) 증가율 최고, 상위권 편중(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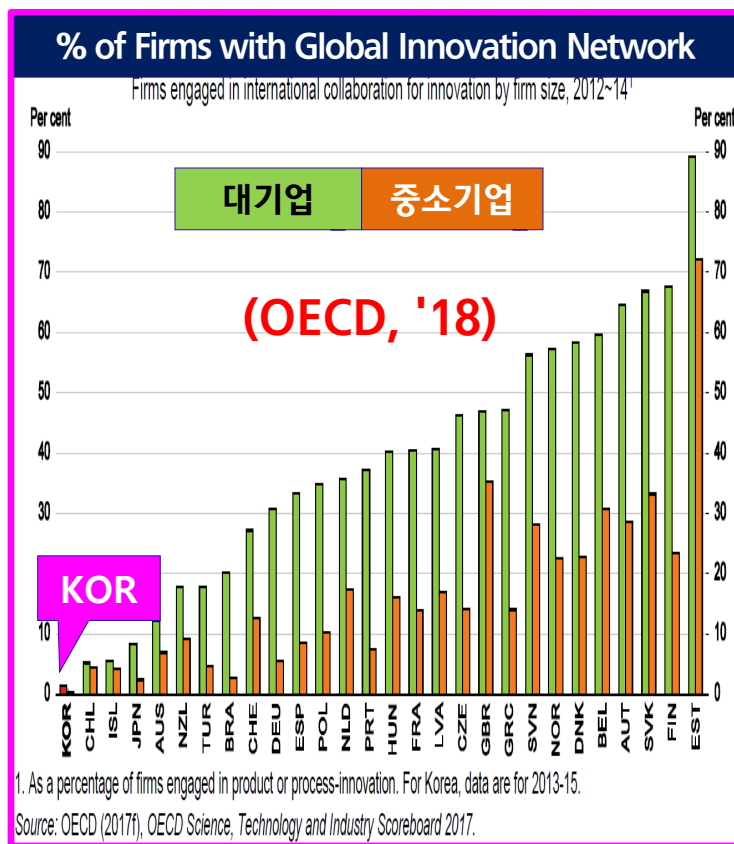


2. 정부(II): 선진국 표준과 동떨어진 규범/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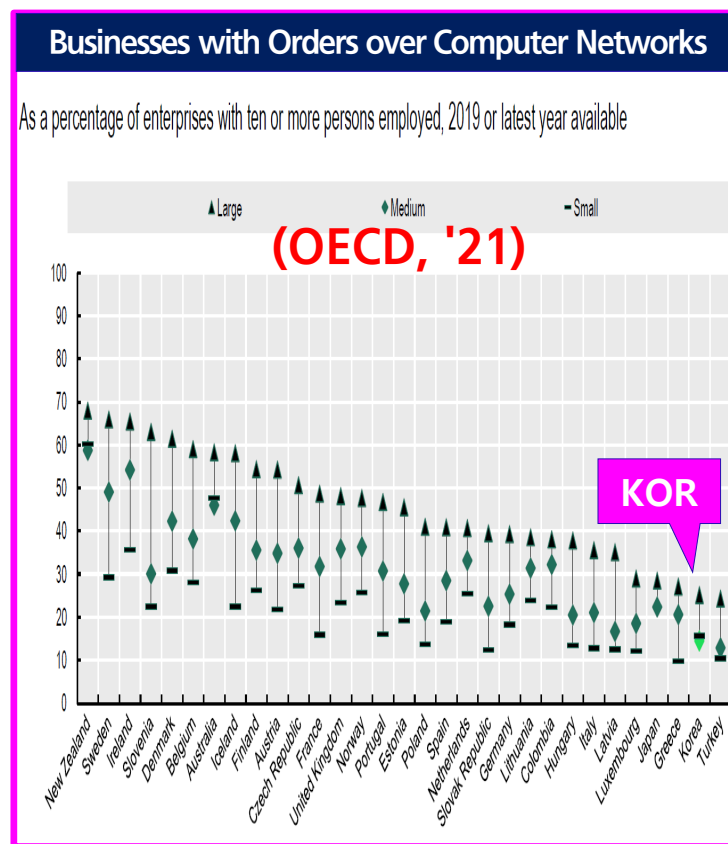
- 기업가정신 위축, 혁신과 新산업 태동 지체
 - ✓ 디지털/데이터 개방/공유/협업 등 혁신 생태계 취약
 - ✓ 낮은 면허/자격/감독/평가에 따른 문턱과 칸막이
 - ✓ 가혹한 중대재해 처벌, 화학물질 평가/등록/관리, 무역 이익 공유 등 규제
 - ✓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/지원과 엄격한 대기업집단 규제 → 성장 사다리 무력화
- 획일 규제와 강성 노조로 자율/책임의 노사관계 요원 → 고용 제약
 - ✓ 정규직/전일제/생산직 위주 경직된 법규/관행: 'Procrustes의 침대' (조준모, '22)
 - 기간제 사유/기간, 호봉 등 임금체계, 근로시간 예외, 정산 기간 단위
 - ✓ 번듯한 직장과 정규직 중심 노조의 횡포, 노조원의 非노조원 탄압

제조업을 Upgrade할 혁신/디지털 역량 낙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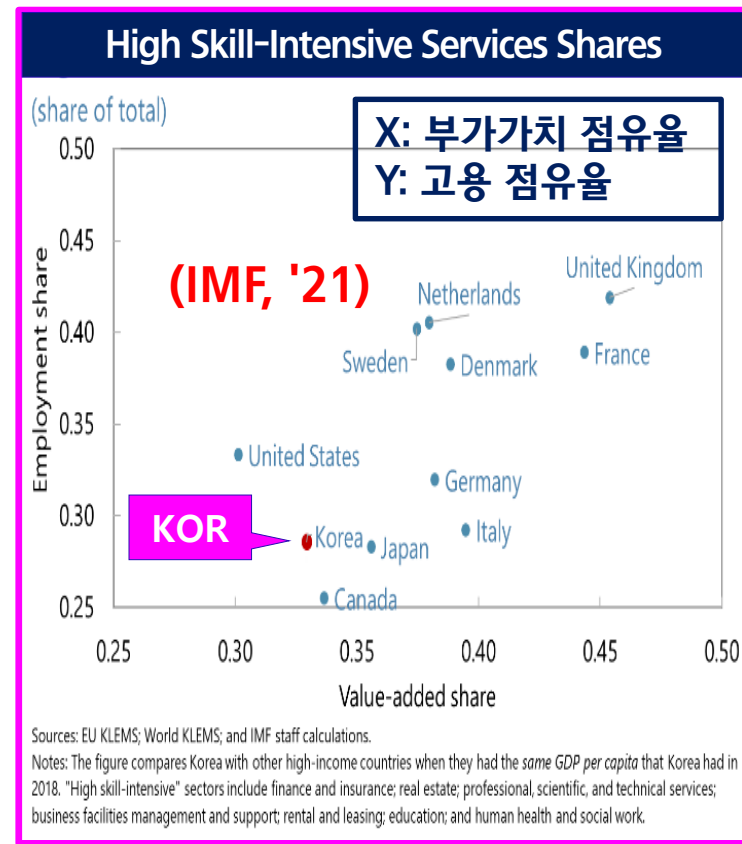
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최하위



컴퓨터 네트워크 受注 기업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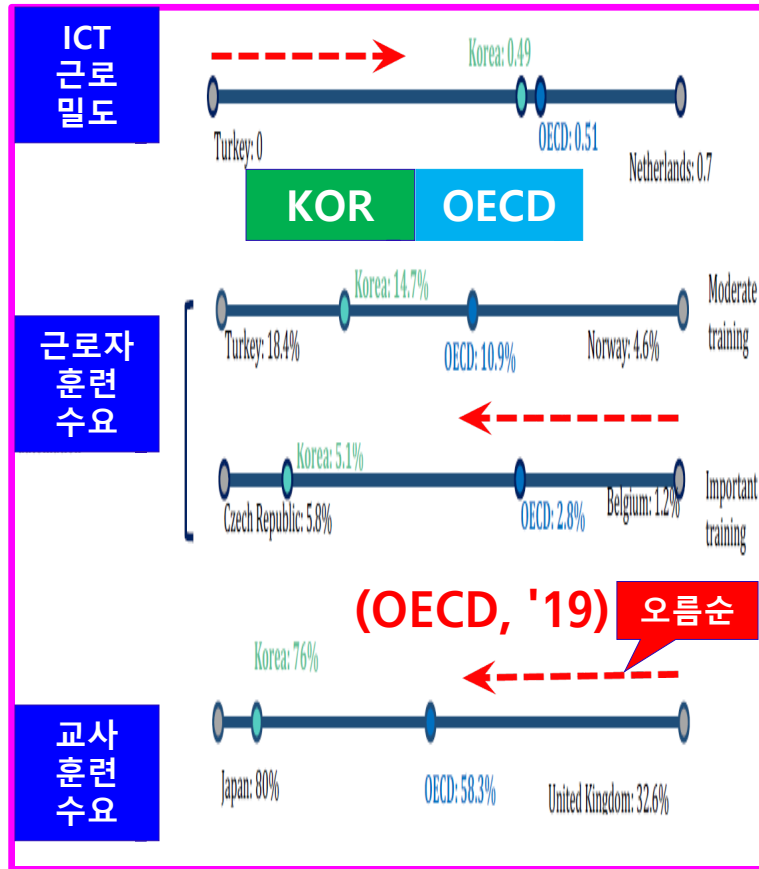


高度기술 집약 서비스 취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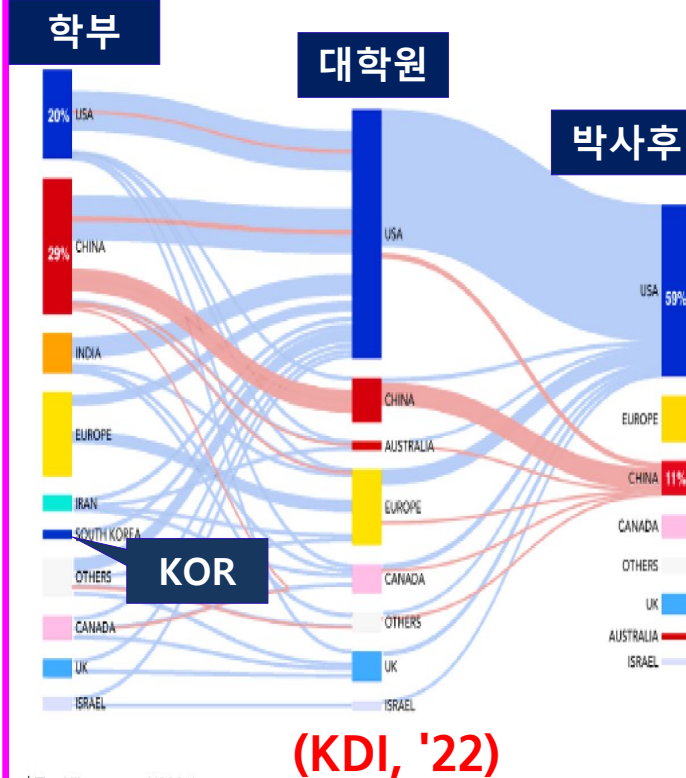
디지털/AI 숙련 미흡, Big Data 활용 저조

디지털 훈련 수요 OECD 평균 초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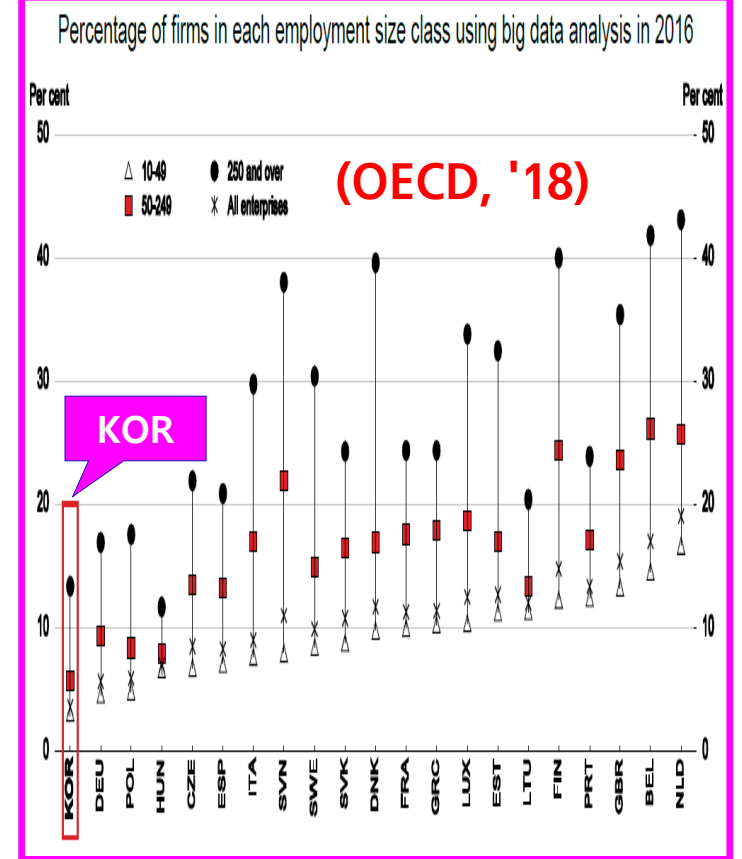
AI 인재 태부족

[그림 2-17] 국별 AI 관련 우수 인재 확보 비중



자료: Allison et al.(2021).

BD 활용 기업 비율 꼴찌



경제력 집중도(OECD 중위권) 지속 하락 vs. 규제는 강화

한국	매출집중도('20년) OECD 19개국 기준	자산집중도('20년) OECD 19개국 기준	한국 추이(2011~2020)
100대기업	15위	15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58.1% → '20년 45.6% ■ 자산집중도 '11년 59.1% → '20년 50.6%
30대기업	14위	15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42.1% → '20년 31.1% ■ 자산집중도 '11년 42.1% → '20년 36.3%
10대기업	11위	13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26.1% → '20년 19.6% ■ 자산집중도 '11년 27.9% → '20년 24.2%

*(KERI, '22)

*OECD 38개국 중 기업데이터가 1,000개 이상인 19개 국가 중 한국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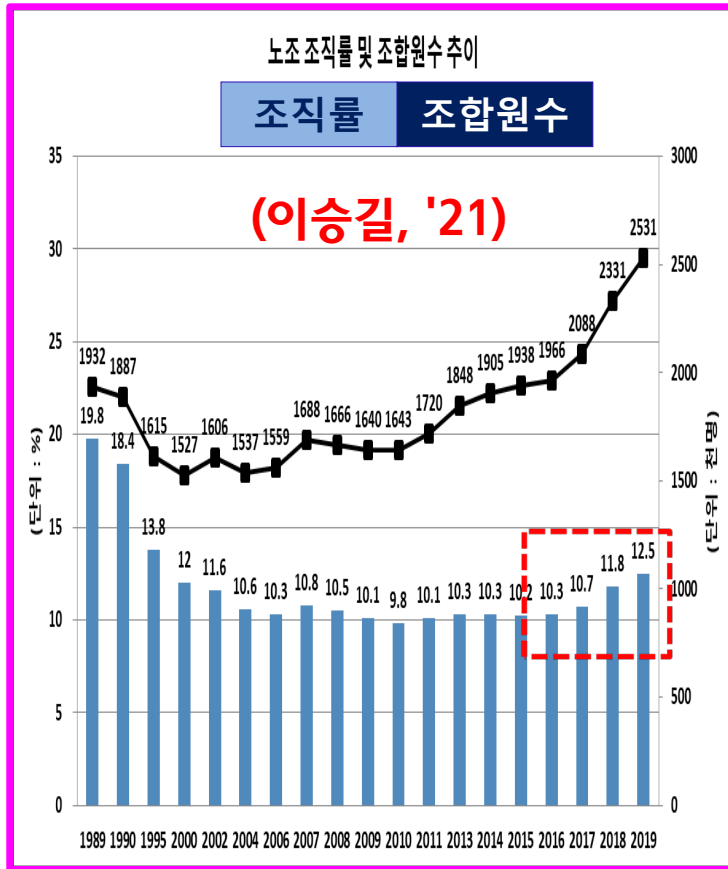
• 상법/공정거래법 ('20년 개정)

- 대주주 의결권 제한
- 주총 보통/특별결의 요건 엄격
- 차등의결권 부인
- 시장지배력 추정 기준 이원화
-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모호
- 정보교환 담합 추정
- 제재 수단/수준 과도

✓ 촘촘한 규제와 잦은 노사분규 → 대기업 해외진출 가속 → 경제력 집중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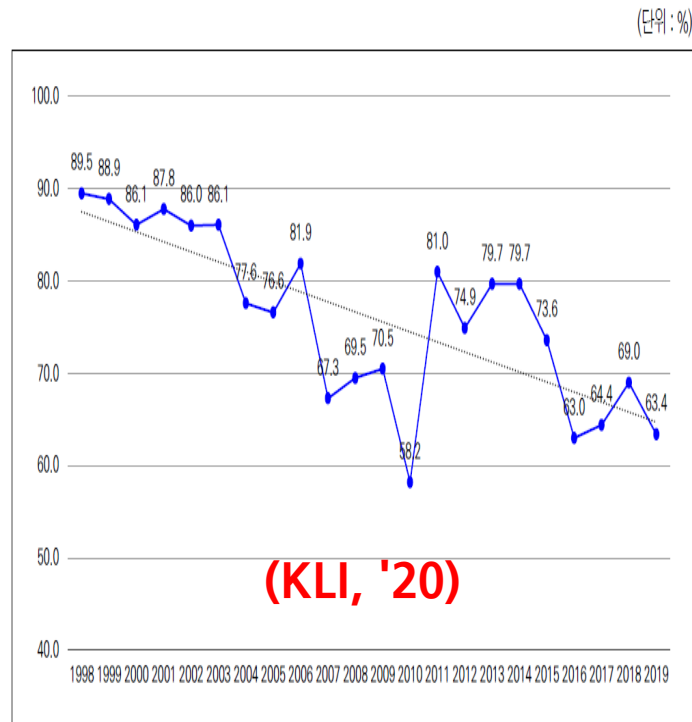
노조 영향력과 노사 불협화음 확대

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



임금교섭 진도

(그림 1) 임금교섭 진도율(각 연도 11월 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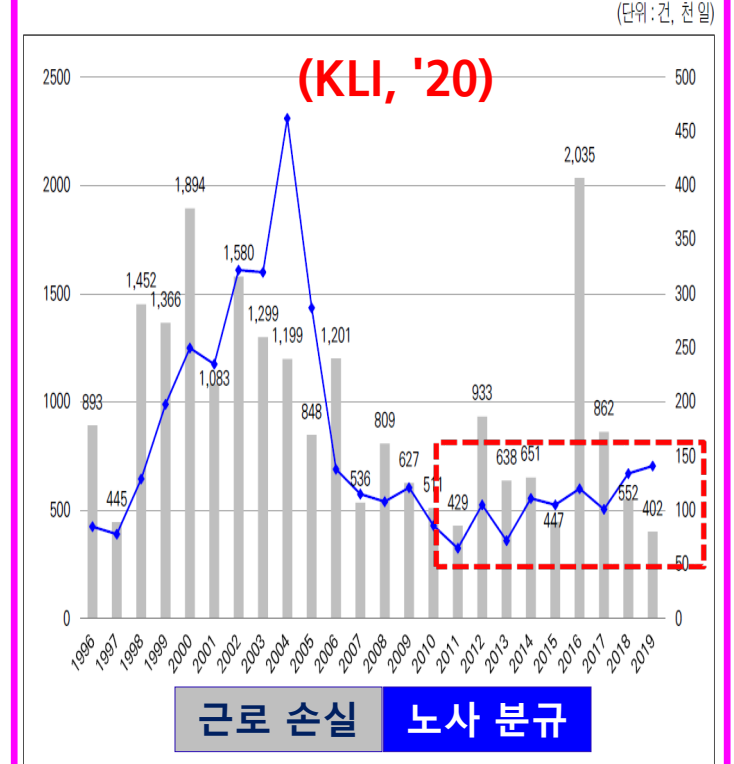


주: 괄호 안은 2018년 같은 기간 수치를 말함.

자료: 고용노동부, 각 연도 11월(1~11월 누계) 임금결정현황 조사 결과.

파업 건수와 근로손실일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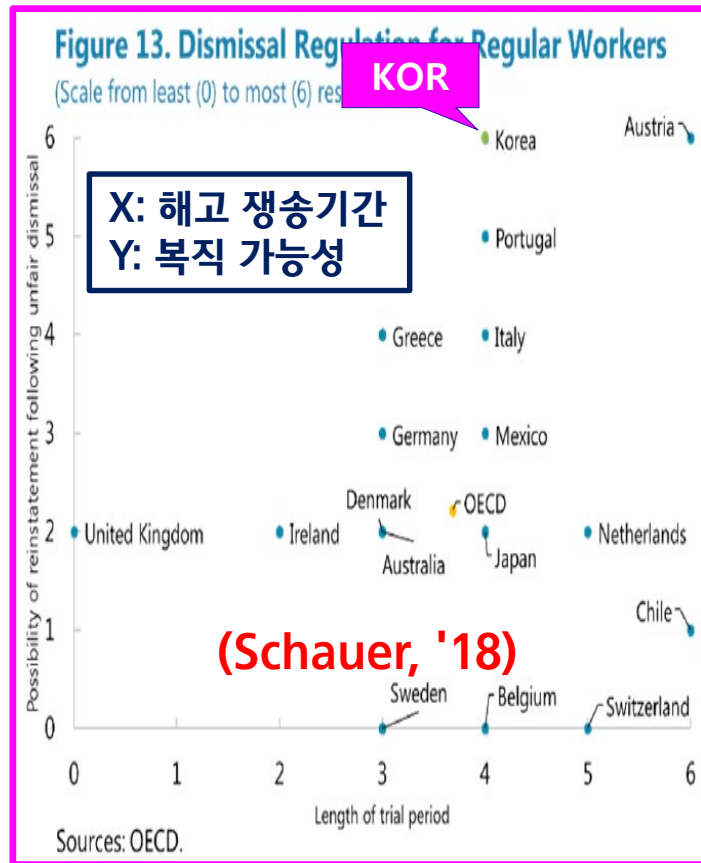
(그림 2) 각 연도 파업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비교



자료: 고용노동부 노사분류 발생건수 집계 자료.

고용의 역동성/다양성 미흡 → 고용률 제약

정규직 해고 규제 강력



종사상 지위 고착

Table 2. Flo 지위의 연간 이동 확률 (2013-20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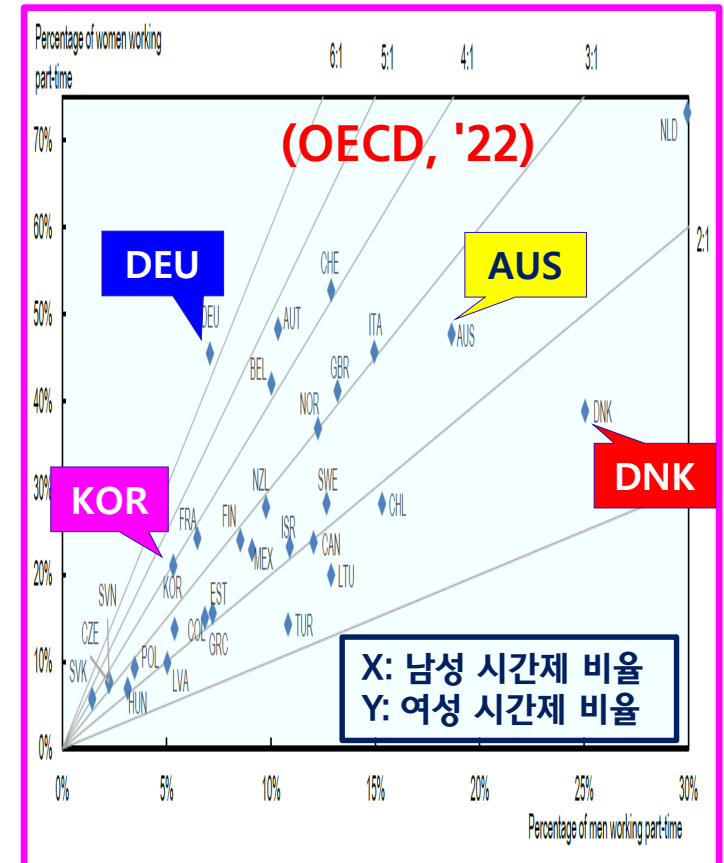
	To			
	Regular	Temporary	Self-employed	Non-employed
Regular	92.5%	1.4%	0.9%	5.1%
Temporary	4.8%	81.4%	1.7%	12.2%
Self-employed	1.3%	2.2%	92.1%	4.4%
Non-employed	3.6%	4.1%	0.9%	91.4%

Source: KLIPS, author's calculations.

(Schauer, '18)

Note: Non-employed includes unemployed and inactive.

시간제 근로 未활성화



I 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 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 걸림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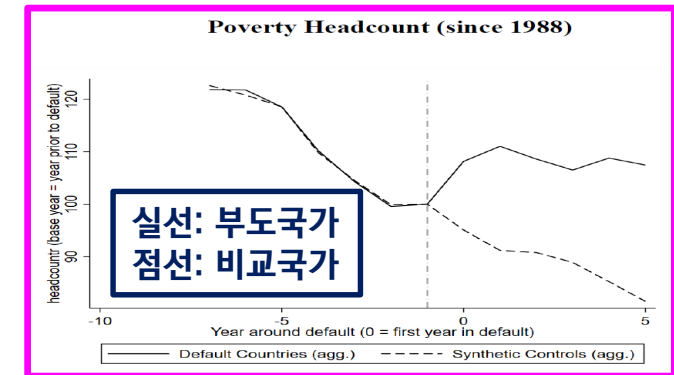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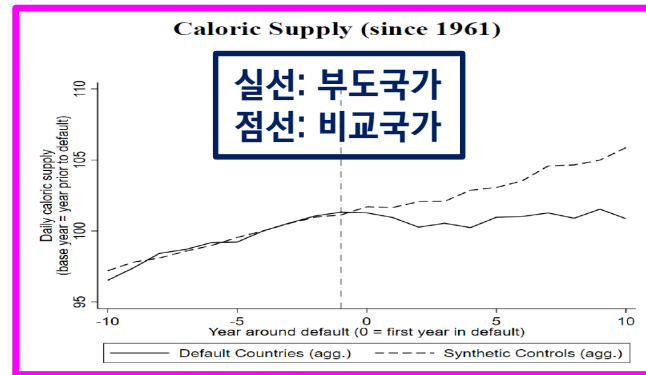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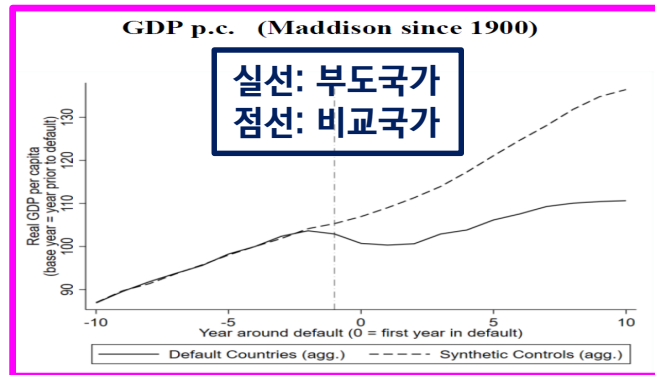


IV 성공법은 구조개혁

구조개혁의 효과 지대, 소홀히 한 대가는 혹독

- '00~19년 126개국 구조개혁 사례 분석: 생산물/노동/금융/법률/기업환경 등
 - ✓ 각 분야 1 표준편차 개선 → 5년간 경제성장률 각 2~6% 상승 (Ari 외, '22)
- 1900년 이후 131개 국가부도 사례 분석 (Farah-Yacoub 외, '22)
 - ✓ 첫 2년 성장률 2.4~3.6%p 하락, 10년 후 1인당 산출 17% 감소
 - ✓ 첫째 빈곤층 30%, 10년 후 영아 사망 13% 각 증가, 기대 수명 1.5% 하락

비교국가 대비 부도국가의 GDP(左), 영양 공급(中), 빈곤층(右) 추이



No Pain → No Gain

- “발등의 불은 꺼도,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.”
- 욕먹더라도 긴 호흡으로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에 진력
 - ✓ 성장률 1%p의 힘: 소득 2배 소요기간 (연 1% 72년, 2% 36년, 3% 24년)
 - ✓ 돈 들지 않는 규제개혁 최우선: **기득권 축소, 保姆국가 탈피**
 - ✓ 성장과 분배는 동행 → 학습(L&D) 개혁, 일자리 창출, 가족가치 복원에 역점
 - 혁신(디지털/AI) 역량 향상, 노동개혁, 지속 가능한 '일하는 복지'
 - 결혼/출산/이민 장려, 탄소 생산성 제고, 해외자원 개발
 - 규범(법치/투명성/자조) 확립과 공민 의식 함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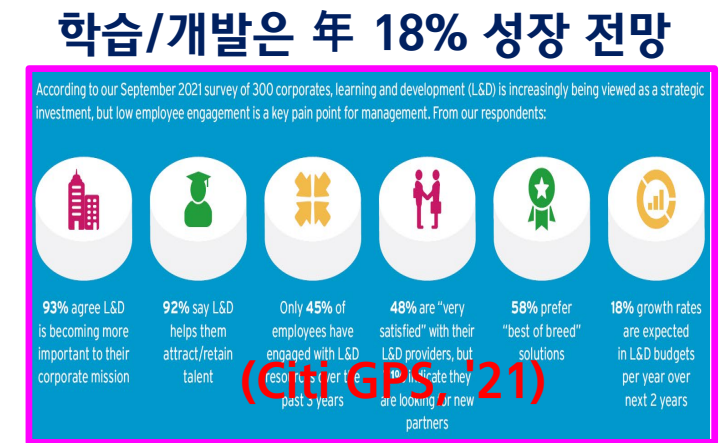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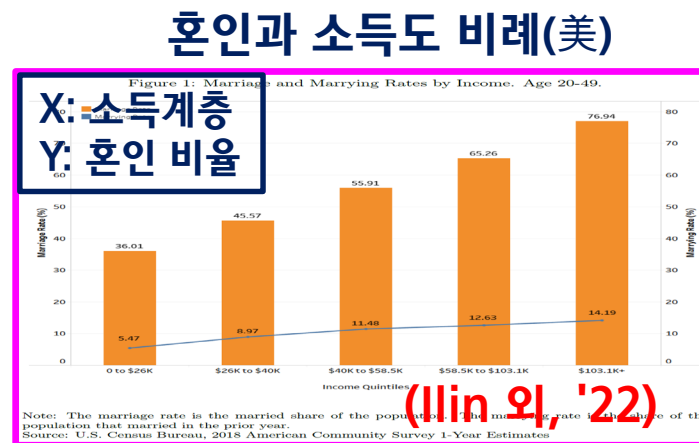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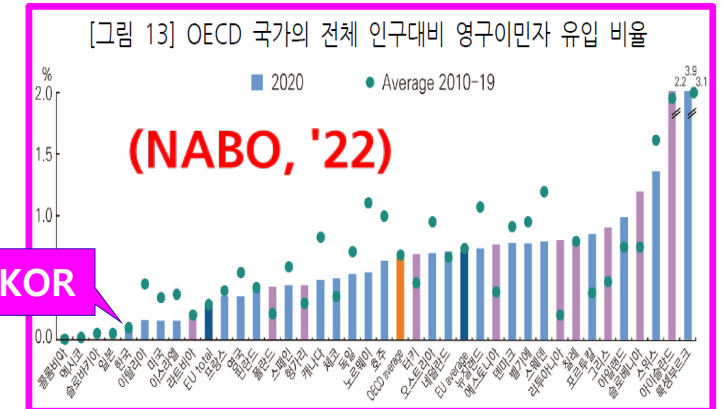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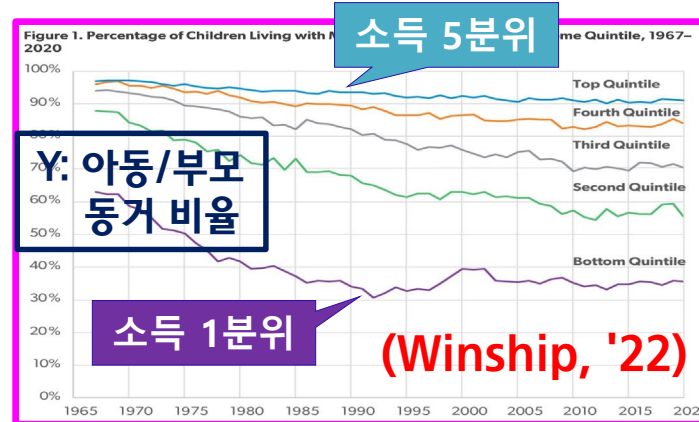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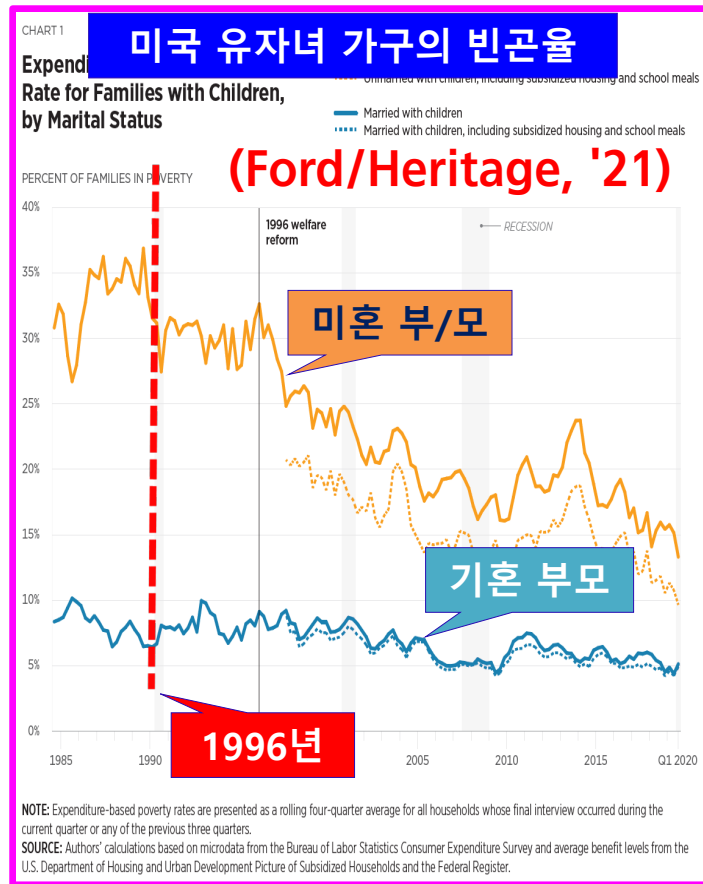
1. 가용 인력 극대화 & 역량 향상

- '일하는 복지'로 자활 촉진: 美 '96 복지개혁 → 빈곤층 감소 (Weidinger, '21)
- 이민 문호 확대: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
- 조기 入職: 조기 취학, 취업 후 진학, 징/모병 혼합, 학부 단축 (Poliakoff, '20)
- 전공/계열을 시장수요에 걸맞게 조정: STEM vs. HEAL, 교과 선택 (Brickman, '22)
- 평생학습/개발(L&D) 정착: MOOC, 중/장년 ICL
- 교육의 자율/다양성 제고: 자사고 확대, AI 맞춤형 학습지체생 교육
- 고용과 인력 이동의 유연성 제고, 年功給 완화

'일하는 복지', 양부모 가족과 L&D가 지속 성장의 디딤돌

'96년 복지개혁 후 빈곤층 격감(美) 아동/부모 동거와 소득은 비례(美)

한국의 이민자 비율 최하위권



2. 자유와 기회 확대 → 민간 활력 증진

- 자율/창의/경쟁/개방/혁신/다양성 고취 → 유인/책임 강화
 - ✓ 균등한 기회 보장, 공정한 규칙/질서 확립을 병행
 - 신호등/카메라/과속 방지턱 vs. 일단 멈춤/자율 교행
- 정부 입김 축소, 시장 친화적 규제, 선진국 표준 수용/창출
 - ✓ M. Friedman: "시장경제는 가난을 이기는 최적의 기제"
 - ✓ 반면교사 J. Curley 보스턴 시장(20C 전반): '가난한 사람들의 시장' 자처
 - 방만한 복지, 만성 부패, 세금 폭등 → 일자리 고갈, 재정 파탄
- 전문가 검증/唱導/公論/熟議 활성화: 교육/에너지/연금 등 백년대계
 - ✓ '25년으로 미룬 재정 준칙을 내실화하고 앞당겨 시행

No pain, no gain!



啐啄同時

